석사학위논문

과거 북한의 핵 협상 실태분석을 통한 비핵화 진정성에 관한 연구

2021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오 준 석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염규현

과거 북한의 핵 협상 실태분석을 통한 비핵화 진정성에 관한 연구

Authenticity study on the nk‘s denuclearization considering the analysis of nk's negotiations in the past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오 준 석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염규현

과거 북한의 핵 협상 실태분석을 통한 비핵화 진정성에 관한 연구

Authenticity study on the nk‘s denuclearization considering the analysis of nk's negotiations in the past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오 준 석

오준석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과거 북한의 핵 협상 실태분석을 통한 비핵화 진정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오 준 석

본 연구는 과거 북한 핵 협상 실태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욕망은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과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핵사용 위협에 대한 김일성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1950년대 말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핵개발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영변에 5MWe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건설하면서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고, 1990년대에는 파키스탄과의 커넥션을 통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체계까지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후는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핵무력 고도화를 진행하여 결국 2017년 11월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다. 1989년에 프랑스 상업위성의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NPT 탈퇴, 5MWe원자로 연료봉 인출 등의 강경책으로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로 19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 체결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2차 북핵 위기는 2002년 북한 강석주 제1부상의 농축우라늄 개발 시인으로 촉발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 3자 회담, 한·미·일·북·중·러 6개국이 2008년까지 6자 회담을 지속하였다. 회담 중간에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제지하지 못하고 말았다. 비교적 긴 시일이 경과된 후이지만, 1·2차 미북 정상회담 에서도 미국과 북한의 협상 옵션과 비핵화에 대한 해석이 달라 유의미한 회담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은 ‘제네바 합의’부터 ‘미북 정상회담’까지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협상은 매번 핵개발 의혹제기-갈등 상황 전개-부단한 협상 진행-협상 결과 이행 갈등 및 추가 옵션 제시-북한의 핵개발 복귀 등의 수순을 밟으면서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고 핵무력을 고도화시켜 나갔다. 그 이유는 북한에 있어 핵무기는 정권생존성과 동일한 가치를 지녔으며, 북한이 국가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써 북한은 법령과 각종 선언, 신년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 비핵화 주장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외에는 주목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심지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핵개발 체계의 제거가 아닌 군축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제재해제 및 핵보유국의 은근한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의도까지도 포착되곤 한다.

본고에서 강조했듯이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시에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의 연구가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국가정책 등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

【주요어】 핵개발, 핵 협상, 핵무력 고도화, 핵무기, 북핵 위기, 제네바 합의, 6자 회담, 미북 정상회담, 비핵화 진정성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 4

제 2 장 북한의 핵 위협 고찰 ····· 8

제 1 절 북한 핵개발 배경 ····· 8

제 2 절 북한 핵개발 경과 ····· 9

제 3 절 북한의 핵능력 ····· 17

제 4 절 북한 정권 생존성과 핵개발의 상관관계 ····· 18

제 3 장 북한의 과거 핵 협상 실태 분석 ····· 28

제 1 절 북한의 핵 협상 전략 ····· 28

제 2 절 제1차 북핵 위기 ····· 29

제 3 절 제2차 북핵 위기 ····· 37

제 4 장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진정성 판단 ····· 53

제 1 절 과거 핵협상 실태와 최근 비핵화 협상의 유사점 ····· 53

제 2 절 최근 북한 핵개발 실태와 비핵화 추진 간의 모순점 ····· 62

제 3 절 북한의 비핵화 주장의 진정성 판단 ····· 66

제 5 장 결론 ····· 70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70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71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법 ····· 72

참고문헌 ····· 74

ABSTRACT ····· 77

표 목차

[표 2-1] 우라늄 매장량 ····· 10
[표 2-2] 북한 핵실험 현황 ····· 16
[표 3-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주요내용 ····· 30
[표 3-2] 북한 신고 핵시설 현황 ····· 31
[표 3-3] 제네바 합의 주요내용 ····· 35
[표 3-4] 9.19 공동 성명 주요내용 ····· 44
[표 3-5] '9.19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 내용 ····· 46
[표 3-6] '9.19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주요 내용 ····· 47
[표 3-7] 북핵 연대기와 핵 협상 융합 도표 ····· 50
[표 4-1] 판문점 선언(요약) ····· 54
[표 4-2] 싱가포르 선언 내용 ····· 56

그림 목차

[그림 2-1] 우라늄 자원 분포 ····· 10
[그림 2-2] 북한 IRT-2000 ····· 11
[그림 2-3] 북한 영변 5MWe 원자로 ····· 13
[그림 2-4] 북한 핵무기 추정 모형 공개 ····· 16
[그림 3-1] 북한 영변 핵시설 ····· 40
[그림 4-1]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 ····· 5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북한의 핵개발은 세계적인 이슈임이 분명하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질서가 여전히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도 북한 핵 문제이다.[1] 북한은 1950년대부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핵을 개발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소형화된 핵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방부가 2018년에 발행한 국방백서에서는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2]고 발표했었으며, 북한이 수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작게 만드는 기술도 보유했다[3]는 사실은 우리에게 북핵 위협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십 회 이상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미국 본토에까지 핵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를 긴장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자칭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헌법 등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초대 집권자였던 김일성은 (구)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과의 핵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영변에 원자력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핵개발 기반을 마련하였고,[4] 김정일은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죽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가의 전 역량을 투입하여 오히려 핵개발을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대로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면서, 핵무기 탑재 미사일 개발에 매달린 결과 핵무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넘어야 할 과제인 통치 정당성도 동시에 확보하였다. 2018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성과로 제시하면

1) 체제통합연구원(2017), "북한의 체제와 정책", p.229.

2) 국방부(2018), "2018 국방백서", p25.

3) 김경민(2017), "김경민 교수의 동북아 평화의 꿈"(서울:(주)새로운 사람들), p81.

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2017), "2017 북한 핵 프로그램 총서"(대전: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p.97.

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하였고 '핵단추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 등과 같은 이례적인 언급을 통해 대미 압박 수위를 제고시키는 등 김정은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 전 세계를 긴장 국면 속에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에 굉장히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핵심에는 '북한 비핵화 선언'이라는 과거에서부터 되풀이 되었지만 언제나 신선함을 주는 주제가 존재한다. 아울러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 아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안보목표로 설정[5]할 정도로 고도화된 북핵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마침 북한이 주장한 비핵화와 발을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에 따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북핵 폐기라는 새로운 국면이 대두되었다.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는 '핵무기 不제조'를 말하면서 先 비핵화 조치를 이례적으로 최초로 언급하였다.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력이 사라진다면, 세계 평화는 물론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국민의 생존권 보장, 국방 부담의 감소, 평화 무드 도래에 따른 남북 협력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가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노출되었다. 북한은 미국에게 영변에 대한 폐기만을 제시하며,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은 영변+α를 요구하여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 핵 폐기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명확하다면 우리나라도 동반자적 입장에서 대변인 역할뿐만 아니라 정상국가로서의 도약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주장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제재 해제 및 향후 핵·미사일 개발

5) 국가안보실(2018),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울:청와대 국가안보실), p.37.

의 고도화를 은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는 신속하게 대북정책을 수정 또는 보완해서 북핵이라는 대단히 큰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를 고려시 북한 관련 전반적인 정책 수립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시급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목적은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과거에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짚어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실리만을 취하는 위기 모면용인지?를 알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 능력을 정확히 알고, 차후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시에 북핵에 대해서 무엇을 폐기하고 동결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이번 연구의 범위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핵 협상에 대한 여러 사례를 고찰하고, 국면별 특징을 분석한 후 최근의 비핵화 상황과 비교분석 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북한이 최초 핵개발을 시작한 1950년대부터 최근 김정은이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한 2019년까지의 핵개발 역사, 핵 관련 협상 및 특이동향에 한정해서 주제를 다루려 한다. 또한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신년사 등을 분석한 내용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을 중점으로 진행할 것이다. 폐쇄적 집단인 북한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 현지에서 구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 관련 연구자료를 활용하려 한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역사와 진행 수준, 북한의 핵 위협에 관련된 학술적인 평가내용, 북한이 과거 수십년간 진행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의 협상 내용과 그에 따른 결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독재자들의 핵개발 및 비핵화에 대한 인식 등 문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특히 북한 핵개발에 관련된 연구자료들은 세계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북한 핵개발과 비핵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도출하고, 필자의 연구성과를 접목하여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과 향후 전망으로 예상하려고 한다. 또한 북한에 관련된 정부기구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려 한다. 특히 국방부 등 북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부부처의 자료들은 최대한 원천자료를 확보하여 사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관련된 핵개발 위협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국방백서' 등이 신뢰성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통일부 등에서 발간된 북한 관련 자료들도 본고 작성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핵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어 있어 접근이 제한되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행되는 각종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91년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이후 30여년이 경과했고 카터 前 미국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어 1994년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지 수십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북한의 핵전략과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본학은 2015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끌어낸 이란의 핵개발 중단 협상을 토대로 강력하고도 단합된 의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를 경제 지원, 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또는 미북관계 정상화, 체제 전환 등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유도하여 단기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공존을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

장하였다.[6]

문순보는 북한이 수령 절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정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지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독재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데 핵무기가 절대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북한이 낙후된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도 정권 생존을 위한 결속이 끈끈하게 유지되는 것은 핵무력의 영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2017년 이후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비핵화를 토대로 제재 해제를 실행하여만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장 급한 것은 자신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기존 지배 연합의 지지를 유지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타 국가의 정권 전복 의도를 애초에 무력화시키고 단념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존재는 북한 정권과 동일한 수준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미북 협상 간에도 서로 다른 비핵화 목표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7] 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수십여년 간의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핵 협상에도 결국에는 북한 비핵화 또는 동결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고려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윤덕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가설과 다르게 매우 공세적인 전략목표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핵보유국을 목표로 한반도 주도권과 정통성이 북한 정권에 있음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공조 내지는 국제공조를 깨려한다고 평가하였다.[8] 이러한 평가는 어느 한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약점이 존재한다. 과거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판단은 타 국가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억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핵개발로 전환된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

6) 구본학(2015),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통일정책연구 제 24권 2호)

7) 문순보(2019), "북한의 핵전략과 비핵화 전망"(북한학보, 제 44집 2호)

8) 윤덕민(2019), "핵무장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평가"(전략연구 통권 제 78호)

장에서 핵개발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타 국가의 대규모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공세적인 핵무기 개발을 드러내놓고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보복공격까지도 언급하는 북한의 핵개발 수준을 고려시 윤덕민의 연구는 본고의 논지 전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제공한다.

황부연 외 2명은 피셔-유리(Fisher-Ury)의 협상전략 이론으로 북한 협상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핵 관련 협상들을 일종의 제로섬(zero-sum)게임으로 보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하도록 주장하고 관철을 추구하는 경성 입장 협상(Hard Positional Negotiation)만을 주장함을 알게 해 주었다.[9] 이 연구결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북한은 세계 평화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핵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핵개발이 좌절되면 정권이 붕괴되는 사항, 핵개발을 빌미로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야 인민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서의 생존과 관련된 입장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핵 협상은 반드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이다.

김진하는 '대북 안전보장, 북한 비핵화'의 외양으로 '한국 무장해제,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또는 미북 핵군축'이 교환되는 것을 '부조리'라 했고,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안보는 거래가 불가한 사항임을 미국 측에 분명히 주지시키고, 비핵화 이행과 검증 완료 전까지, 대북제재를 굳건히 유지할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주장했다.[10]

박재완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비통제 협상 및 이행 간 북한의 진정성, 신뢰의 문제가 북한 비핵화의 진행 간 신고, 사찰, 검증에서 최대의 난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11]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북한의 핵 협상 전략을 분석하고 비핵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연

9) 황부연 · 김에스라 · 유호열(2016), "미북 핵협상의 전략적 분석"(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5집 1호)

10) 김진하(2019), "체제보장과 비핵화 : 안전보장 패러독스와 북한의 전략적 도전"(전략연구 통권 제 78호)

11) 박재완(2018), "남북 · 미북 정상회담의 함의 분석을 통한 북한 비핵화 방안"(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온건, 또는 강성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논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본고의 작성에 있어서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행은 결국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한다. 협상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나라가 통첩, 서한 따위의 외교문서를 교환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약속하는 일'[12]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북한과는 꽤 많은 약속을 하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적 측면보다는 그들이 과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경과와 과거의 핵협상 실태를 살펴보고 북한의 비핵화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0년)

제2장 북한의 핵 위협 고찰

제1절 북한 핵개발 배경

북한의 지도자가 핵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당시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에 기인한다.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미국 대통령의 말은 북한 김일성에게는 상당한 두려움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패배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고, 그에 비례하여 핵무기를 보유에 대한 욕망이 생겼을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최초로 세습권력을 받은 지도자로서, 국제사회와 국내 유력한 정권간부 및 혁명세력들, 그리고 전 인민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성과가 필요했다. 김정일은 이러한 절대적 성과를 핵개발에서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열악한 북한 내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서도 흔들림없는 정권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도 핵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군사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데, 김정일의 입장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인 북한의 재래식 전력 대신 단번에 승리 및 전쟁 종식을 보장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를 열망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서는 선대 지도자들이 이룩해놓은 핵개발 기반 위에서 실제 무력으로써 운용이 가능한 핵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조건으로 핵보유국의 위치를 누리면서 핵 군축 등 일부 핵 능력의 거래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경제적 지원 등을 노리기 위해 핵개발을 지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전 인민의 경제적 생활 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무리 세습권력이자 독재권력인 김정은의 지위도 전 인민의 동의 없이는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무기를 옵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얻어내고, 이를 통해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군림하고 싶었기 때문에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 배경은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북한 김씨 일가의 정권보장이 핵개발의 가장 큰 이유임에 분명하다.

제2절 북한 핵개발 경과

1) 핵개발 기반 구축 시기(1950 ~ 196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김일성은 1955년 4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립을 결정했으며, 1950년 말부터 다수의 핵 관련 과학자들을 (구)소련의 핵연구소에 파견하면서 핵무기 관련 과학자들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1959년도에는 북한과 구소련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분야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유학생들을 동독과 중국에 파견해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게 했다. 이어서 북한은 지하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이점을 활용해 자국 내 우라늄 광물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1960년대 초에 고품위의 우라늄 원광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평안북도 순천과 황해남도 평산에서 많은 양의 우라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광산에서 채광할 수 있는 양은 가채량 기준 약 400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다.[13] 북한이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절반 정도를 보유한 셈이다. 세계의 유력한 우라늄과 에너지 기관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래 그림 [2-1]은 생산비가 130$/kgU[14] 미만인 우라늄의 확실 매장량(RAR) 분포도를 나타낸 것으로 호주(29%), 카자흐스탄(13%), 캐나다(9%), 러시아(9%) 등 몇몇 나라에 우라늄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1]은 생산비에 따른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을 나타낸 것이다. 생산가격이 260$/kgU 미만인 우라늄의 확실 매장량은 51개국에 약 955만톤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15] 이를 통해 북한이 얼마나 많은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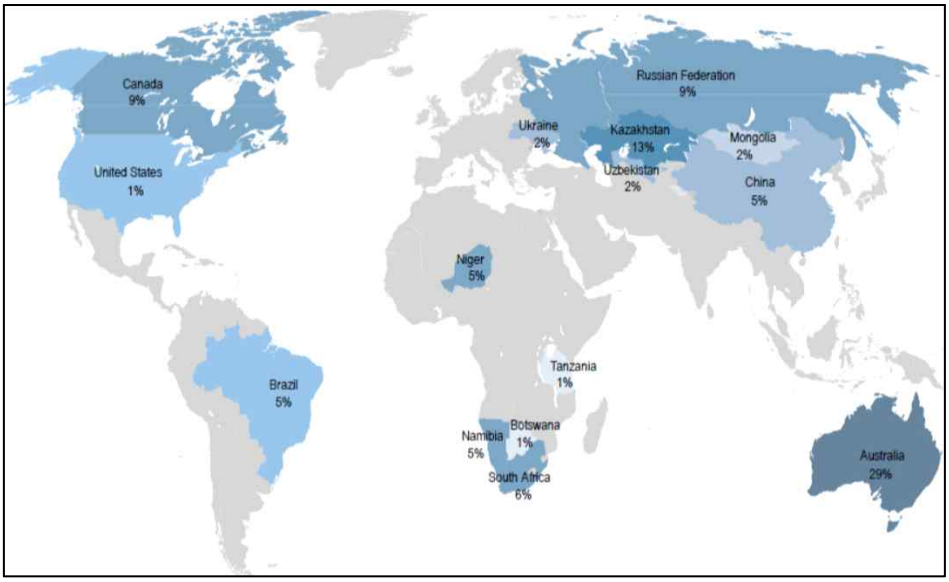
---

13) 안준호(2018), “핵무기와 국제정치”(주식회사 열린책들), pp.265~266.

14) $/kgU : 우라늄 매장량은 우라늄 단위 무게의 채광(회수) 비용이 일정금액이하인 우라늄의 저장량으로 산출하며, 광석 채광의 경제성 기준으로 작용함.

15)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2020년 11월 2일 접속, https://atomic.snu.ac.kr/index.php/우라늄자원

[그림 2-1] 우라늄 자원 분포(생산비 130불/kgU 미만 확실 매장량 기준)



* 출처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2020년 11월 2일 접속
(https://atomic.snu.ac.kr/index.php)

[표 2-1] 우라늄 매장량

구 분 (생산비 기준)	확실 매장량 (천톤)	추정 매장량 (천톤)	확인 매장량 (천톤)
40 $/kgU 미만	479	168	647
40~80 $/kgU	1,224	901	2,125
80~130 $/kgU	3,458	2,260	5,718
130~260 $/kgU	4,386	3,255	7,641
합 계	9,547	6,584	16,131

* 출처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2020년 11월 2일 접속
(https://atomic.snu.ac.kr/index.php)

1962년 당시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에 본격적인 원자핵 연구소를 설립하고,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2MWt급 IRT-2000[그림 2-2] 원자로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소련으로부터 평화적 목적의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용 원자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적은 구실에 불과하며 본래의 도입 목적은 북한 핵개발을 지탱할 연구사들의 교육 및 핵무기 관련 초기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 1967년부터 운전되기 시작한 이 원자로는 1968년 소련이 이라크에 공급해 준 원자로와 동일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 원자로는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다. 북한은 이 원자로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본래 목적의 핵개발 연구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시작했다. 도입 초기에는 (구)소련에서 IRT-2000의 핵연료를 제공하였으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북한은 자체적인 핵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 북한 IRT-2000

* 출처 : 일본 원자력에너지 기구, 2020년 11월 28일 접속(IRT-2000 site:jaea.go.jp)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카스트로를 배반하고 쿠바에서 결국 미사일을 철수하게 되자, 북한

은 (구)소련을 동맹국으로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1965년 북한 대표는 소련의 수상 알렉세이 코시긴(Aleksei Kosygin)에게 “북한의 지도자는 소련 공산당과 소련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이 정말로 북한과 소련의 상호 우호 조약에 따라 북한을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16] 그 후 북한의 김일성은 1960년대 말까지 구축된 북한의 핵개발 기반을 토대로 소련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핵개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 플루토늄(Pu) 생산 체계 확보기(1970 ~ 1980년대)

1970년 11월, 북한은 제 5차 당대회에서 ’북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6개년 계획‘에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지침을 포함하면서 본격적인 핵개발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핵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73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핵물리학과, 방사화학과를, 김책공업대학에 원자로공학과를 설치했다. 그릭고, 1976년에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에 관한 물리, 화학적 기초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동위원소생산연구실을 설치[17]하여 각종 핵무기 이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1980년대에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7월에는 영변에 5MWe 원자로[그림 2-3] 건설에 착공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셀라필드에 있는 콜더홀(Calder Hall) 원자로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북한이 콜더홀 원자로를 모델로 삼은 이유는 첫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 자료가 비밀에서 해제되어 손쉽게 자료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두 번째는 우라늄 농축이 필요없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해 마그녹스 합금으로 피복한 핵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우라늄 농축 기술이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조건이었다. 세 번째는 상용 전기생산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Spent fuel)를 이용하여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18] 애초에 흑연감속로

16) 안준호(2018), “전게서”, pp.266~267.

17) 권태영・노훈・박휘락・문장렬(2014),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한국안보문제연구소), p.129.

18) 안준호(2018), “전게서”, p.268.

형태인 5MWe 원자로는 전기생산 보다는 노심 구조 특수성으로 인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 더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 자체 기술로 건설된 5MWe 원자로는 1980년 말에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플루토늄 추출량은 원자로가 저출력으로 운전될 경우 1회 운영기간 동안 플루토늄을 약 11kg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1994년까지 열출력 8~12MW에서 정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됐으므로 매년 플루토늄 생산량은 약 5~6kg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19]

[그림 2-3] 북한 영변 5MWe 원자로

* 출처 : 38north, 2020년 11월 25일 접속,(https://www.38north.org/2018/03/yongbyon030518k/)

또한 5MWe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1985년에 착공하였으며 4년 후인 1989년에 일부 설비의 가동을 개시했다.[20]

1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영변 5MWe원자로 플루토늄 추출“, 2020년 11월 3일 접속 (https://nkinfo.unikorea.go.kr/)

20) 권태영・노훈・박휘락・문장렬(2014), “전게서”, p.129.

북한은 1986년에 김일성 지시에 따라 핵개발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원자력총국을 노동당 군수공업부 예하에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1970년와 1980년대에 핵무기 개발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무기급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는 핵연료주기를 일정 수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고농축우라늄 기반체계 확보 시기(1990년대)

1990년대 북한은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 확보에 비약적인 발전을 달성하게 되고 플루토늄 기반의 핵무기 개발에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북한은 1990년대에 핵무기의 기본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파키스탄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북한과 파키스탄 간에 '핵과 미사일 커넥션'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8년 6월 7일 파키스탄에서 북한 여성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이다. 그녀는 1998년 5월 28일 파키스탄에서 실시한 최초의 지하핵실험을 참관하기 위해서 파견된 북한 대표단의 일원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C-130 수송기로 평양으로 이송되었으며, 이 수송기에는 원심분리기와 설계도면, 기술자료, 고농축우라늄 원료인 육불화우라늄(UF_6) 등이 실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1] 그리고 1993년 이후 13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한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인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가 파키스탄 당국의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고농축우라늄에 관한 북한과의 거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주요 장비와 물자를 보내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북한에 소규모의 완성된 원심분리기와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보냈으며, 원심분리기 수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 구매목록도 전달했다.'라고 증언하였다.[22]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북한 전파는 북한의 핵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도약의 순간이었으며, 향후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1990년대에 이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하여 핵

21) 전성훈(2004),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 실태"(통일연구원), p.6.

22) 전성훈(2004), "상게서", p.7.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었다.

물론 1990년대에는 제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하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핵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았겠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한 야욕을 잊지 않은 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은폐, 위장 등을 통한 핵개발을 진행하였다.

4) 핵무기 개발 및 핵능력 강화 시기(2000년대 이후)

북한은 2000년 이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2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으로 시작된 미북관계의 대립이 결국 2002년 북한 핵동결 해제 선언으로 이어져서 2003년에는 결국 북안의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이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명분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사항은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005년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전격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이듬해인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후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위력과 규모는 표 [2-2]에 명시하였다. 1~5차는 핵분열탄 계열의 핵무기(또는 핵 폭발장치)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6차는 정부에서 발표한 위력을 고려시 수소폭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9일에 구 형태의 핵무기로 보이는 장치를 [그림 2-4]와 같이 공개하였고, 동시에 김정은은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미사일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 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 들 때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이라고 거듭 핵 위협 발언을 이어갔다.[23]

또한 2017년에 6차 핵실험 직전에는 [그림 2-4]와 같이 장구 형태의 핵무기로 추정되는 장치를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분열 및 열핵장약을 비롯한 수소탄의

23) KBS((2016년 3월 9일자 보도), 2020년 11월 21일 접속(http://news.kbs.co.kr/news/)

모든 구성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공정으로부터 부분품 정밀가공 및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앞으로 강한 위력의 핵무기들을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24)]

[그림 2-4] 북한 핵무기 추정 모형 공개

<원형 핵폭탄 모형>

<수소폭탄 모형>

* 출처 : KBS 보도(2016년 3월 9일 / 2017년 9월 3일)

[표 2-2] 북한 핵실험 현황

구 분	일자 / 장소	위력(kt)	북한발표
1차	2006년 10월 09일 / 함북 길주군 풍계리 갱도	0.8	조중통,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핵실험 성공"
2차	2009년 05월 24일 / 함북 길주군 풍계리 갱도	3~4	조중통, '핵 억제력 강화 / 폭발력, 조정기술 향상
3차	2013년 02월 12일 / 함북 길주군 풍계리 갱도	6~7	조중통,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 사용
4차	2016년 01월 06일 / 함북 길주군 풍계리 갱도	6	조중통, 첫 수소탄실험
5차	2016년 09월 09일 / 함북 길주군 풍계리 갱도	10	조중통, 핵탄두 표준화 / 규격화 달성
6차	2017년 09월 03일 / 함북 길주군 풍계리 갱도	약 50	조중통, ICMB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 출처 : 관련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재정리

24) KBS((2017년 9월 3일자 보도), 2020년 11월 21일 접속(https://news.kbs.co.kr/news/)

제3절 북한의 핵능력

북한의 핵능력은 전 세계의 이슈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수십여 년간 베일에 감춰진 북한의 핵개발의 실상과 실제 핵무기 보유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허장성세가 매우 용이한 핵개발의 특성상 북한의 핵능력을 아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파악하는데도 요소 중 하나이다.

일단, 북한의 핵무기는 실체가 확인된 적이 없다. 북한이 수십여 년간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켜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6회의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고려 시 어느 정도의 핵능력이 있다고 추측할 뿐이다. 미국, 영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도 수십여 년의 핵개발을 진행한 결과 핵융합무기가 결합된 탄도미사일 개발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북한도 유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현재의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지기뿐만 아니라 괌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5] 특히, 6차 핵실험은 'ICBM 장착용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북한이 주장하였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서부와 중북부 주요 도시에 대해서도 핵공격이 가능해진다.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핵위협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다.[26]

이러한 목적으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ICBM과 SLBM 개발을 목표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성능 고도화 및 잠수함의 운항거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7]

그렇다면 북한은 현재 얼마만큼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까? '스톡홀롬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북한은 20~30개의 핵탄두를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미국의 군축운동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

25) 전재성(2016),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북 경제제재 심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p.3.

26) 한국국방연구원(2017), "북한 6차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및 함의". p.4.

27) 전재성(2016), "상게서 ", p.4.

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20~30개의 핵탄두와 30~60개의 핵탄두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28]

그러나 가장 공신력있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각종 언론매체 등에 발표하거나,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공개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 핵무기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플루토늄은 약 50kg, 고농축우라늄은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핵무기 소형화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29]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도 2017년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급인 화성 14형, 15형을 시험 발사하는 등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을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능력은 판단이 제한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30]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단체 등 많은 조직들이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정확한 핵무기 보유량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수량을 언급한적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섣부른 북한의 핵능력 추측보다는 북한이 핵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실제로 북한의 핵능력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기관이 바라보는 한 방향의 귀결점은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4절 북한 정권 생존성과 핵개발의 상관 관계

1) 김일성의 핵개발

1939년 우라늄에 의한 핵분열로 인해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무기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선도한 나라는 미국

28) 조경근(2019), "북한 비핵화의 주요 변수 분석"(통일전략 제19권 3호), p.150.

29) 국방부(2018), "2018 국방백서", p.25.

30) 국방부(2018), "상게서", p.25.

이였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자폭탄을 제조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맨해튼 계획'으로 명명하였다. 그 결과 원자폭탄 3개를 완성하였다. 그 중 한 개는 1945년 7월 16일에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두 개는 같은 해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되었다.[31]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김일성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을 알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사용을 검토하였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핵무기 보유가 염원했을 것이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종전 이듬해인 1954년에 인민무력부 산하에 '핵무기 방위부'를 설치하였으며, 1955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학 강좌를 개설하여 핵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동년 3월에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한 것은 김일성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핵 관련 정책을 추진하던 즈음인 1955년 7월에 미국은 극동 지역 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일성의 턱밑에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사실은 핵무기 위력을 알고 있는 김일성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가 없고, 형제의 나라인 중국에도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구)소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공포와 절박함은 1956년 2월에 북한 핵과학자를 소련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핵연구소로 다수 과학자들을 파견 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김일성은 정권초기에 미국으로부터 발생된 대외적인 불안감 해소와 내부적으로 수령 정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구)소련의 선진화된 핵 전력은 북한이 가장 염원하던 강력한 억제 및 통치 수단이었을 것이다.

1962년 10월, 당시 세계를 "통제"하였던 미국과 (구)소련은 쿠바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보통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불리는 1962년 10월 위기에서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선전포고에 핵무기를 적재한 소련 선박이 자국으로 회항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해소되었

31) 정욱식 · 강정민(2011), "핵무기"(동아문화사), p.87.

다. 김일성은 이러한 (구)소련의 행동에 매우 많이 실망하면서, 자위적 차원의 강력한 군사력을 더욱 갈망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타국의 공격이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억제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서의 핵무기를 원했을 것이다.

1962년 12월 14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당시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된 것은 없으나, 경제난 해소와 더불어 자위적 차원의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주제들이 토의되었을 것이다. 4년 뒤인 1966년 2차 당대표대회에서 김일성은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건설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경제발전을 일정하게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하였다.[32] 국방력 강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62년 8월 24일 북한의 박상철 외상은 (구)소련의 바실리 모스코프스키 대사에게 "지금 당장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33]한 것만 보더라도 김일성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핵무기 보유를 원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은 핵개발 분야에서 무기로서의 개발 성과보다는 후대 통치자인 김정일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토양을 마련했다. (구)소련과의 협조 하 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변에 핵단지의 기초를 구축하는 등 김일성의 노력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개발은 불가능했거나 수십년 이상 지체되었을 것이다.

2) 김정일의 핵개발

김정일의 통치 시기는 아버지인 김일성과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랐다. 김정일은 자신의 통치 체제의 정당성을 스스로 찾아야 했으며, 낙후된 경제상황, 특히 수십만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하에서도 자신의 정권

32) 이몽룡(2018),"북한의 위기인식과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79.

33) 정현숙(2019),"김정은 시대 핵무력건설의 기원에 관한 연구"(한국정치연구 제28집 제3호), p.113.

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독재자의 길을 걸었다. 김정일은 자신이 북한을 통치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합리성을 '국가를 지키는 통치자, 외세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주성을 지키는 영도자'에서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김정일은 핵무기를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즉, 김일성이 종전 이후 건국을 위해 대외적인 위협 분쇄와 대내적인 신격화 통치를 위해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용 핵개발을 시도했다면, 김정일은 아버지가 이룩한 토대 위에서 국가 통치의 정당성 확보와 안정적인 국가 운용을 위한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김정일의 핵개발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과 통치자가 된 후 정당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먼저 김정일이 통치자가 되는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자.

김정일의 정확한 출생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으나, 1940년 10월 23일 만주에서 일본군의 토벌에 쫓기던 김일성은 김정숙과 함께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국경을 불법 월경하여 소련으로 도주하였다. 소련으로 망명해온 항일세력들은 보로실로프(오늘날의 우수리스크) 근처의 남야영(南野營, B캠프)과 하바로프스크 인근 바츠코예 마을의 북야영(北野營, A캠프) 두 곳에 분산 수용되는데 김일성은 남야영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1941년 2월 16일에 김정일이 태어났다. 남야영은 보로실로프 근처 조그만 기차역이 있는 하마탄이란 마을에 있었다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 중간쯤에 있는 오늘날의 라즈돌노예 마을이다. 김정일이 태어난 집은 기차역 부근의 라즈돌노예 마을 길(Lazo St.) 88번지(2층 빨간벽돌집)로 지금도 남아있어 연해주 관광 코스로 되어 있다.[34]

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김정일은 (구)소련에서 태어났으나, 권력승계를 위한 우상화, 신격화 작업을 위해 출생지를 백두산 인근 밀명으로 왜곡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김정일 전기인 『김정일 지도자 1』에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백두산 항일유격대 밀영에서 태어나시었다"라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35] 김정일의 출생을 조작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

34) 위키백과, "김정일", 2020년 11월 24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BC)

가 있다. 첫 번째는 1980년대부터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그리고 그의 혈육들)의 신격화와 사회주의 사상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일종의 광신도 집단의 사상과 같은 주체사상을 국가 통치이념으로 적용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공개적으로 부각되자, 주체사상의 중심이자 통치자인 김정일의 출생지를 소련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민족이 성산인 백두산과 항일무장투쟁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태생적으로 정통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인 것이다.[36]

이후 김정일은 1964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여, 1974년 2월,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실질적인 후계자로 등극하게 된다.

북한이 대내적으로 이러한 권력승계 과정을 시나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세계는 또 한번의 지각변동을 겪게 되는데, 바로 동구권과 (구)소련의 붕괴이다. 1989년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붕괴되는 것을 필두로 1990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12월 모든 (구)소련의 공화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김정일은 충격에 빠졌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북한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북한을 지원해준 (구)소련의 붕괴는 김정일로 하여금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통치체제 안전성과 관련하여 적대적인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에 대한 체제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북한은 (구)소련이 붕괴된 원인을 미국이 유도한 과도한 군비경쟁에 말려든 결과 국내경제의 파탄으로 인해 붕괴되었다고 분석했다.

김정일은 이러한 시각을 북한에도 적용하여 한미 팀스프리트 훈련을 비롯한 연합 군사활동이 북한의 과도한 대응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경제 파탄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35) 이몽룡(2018),“전게서”, p.117.

36) 이몽룡(2018), “전게서”, p.117.

따라서 김정일은 정권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책은 외세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군사적 이슈에서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대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을 것이다.[37]

또한 김정일은 199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재래식 무기보다는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급적 단시간 내 핵무기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파키스탄과의 비밀 커넥션을 통해서 핵심 핵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파키스탄과의 커넥션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플루토늄 체계의 핵무기 개발 뿐만이 아니라,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한 핵무기 체계를 병행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러 공개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 및 장비와 물자 등을 북한에 전파했고, 이는 북한의 핵개발이 일취월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김정일의 핵개발에 대한 성과로서 2006년 10월 9일에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을, 2009년 5월 24일에 2차 핵실험이 실시되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는 증폭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핵무력 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갔다.

핵개발에 있어 김정일의 성과는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위한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충, 핵기술과 관련되어 다수의 국가들과의 협조 체계 강화, 국제사회의 이목 속에서 수많은 은폐 및 위장을 통한 핵능력의 보존 등을 통해서 김정일은 무기로서의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본격적인 체계를 확보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핵무기 위협에 관련되어 위험한 국가로 분류하여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김정일 통치시대부터이다. 김정일은 인민의 경제 상황,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자리매김 및 인식을 모두 희생하면서까지 절대무기인 핵무기 보유를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둔

37) 남궁영(2003), “북한 핵개발과 미국”(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2호), p.110.

듯하다. 그리고 핵무기와 미사일의 결합 등 원거리 투사를 통한 핵공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의 연구를 후대 통치자인 김정은에게 물려주기 위해 나름대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김정은의 핵개발

김정은이 2010년 9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사상 처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고,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전격 선출되면서 김정일에 이은 3대 권력 세습의 후계자로 선정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2011년 12월 17일, 심근경색으로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그러자 김정일의 후계자였던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조선중앙TV의 특별 방송에서도 김정일 추모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면서 권력 서열 1위로 차기 후계자로 낙점되었고, 정권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1970년대 후반에 결정되면서 20년 가까이 정치 최일선에 나섰으며 김일성 말년에는 권력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사실상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북한의 정치 전면에 나타난 것은 2~3년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권 계승은 받았으나 실권 장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1994년 김정일의 승계시 보다 북한의 국내정치 상황은 불안정해질 것이나, 기존 시스템이 건재하고 중국 등의 지원으로 인해 체제 붕괴나 내전까지는 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생각보다 명석했으며, 과감했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강력한 실권을 보유했으며,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고 당, 군, 정의 반대파를 과감하게 숙청하면서, 1인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였다.[38]

그리고 김정일은 사망 2달 전인 2011년 10월에 약 40여개 항목에 달하는 '유훈'을 남겼다. 이 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가장 특별한 이유가 없

38) 나무위키, "김정은", 2020년 11월 24일 접속
(https://namu.wiki/w/%EA%B9%80%EC%A0%95%EC%9D%80)

는 한 김정은을 후계자로 한다', '현 남조선 정권 하에서는 북남관계 개선이나 통일은 불가능하다. 남조선 다음 정권과의 관계에서 사상적으로 철저한 우위를 차지하며 그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경제,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 것', '미국과의 심리적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하며 국제제재를 풀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39] 등이 있다. 김정일의 유훈을 살펴보면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에 대한 염원과 정권 생존성과 핵개발을 동일시 하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인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 지 얼마 뒤인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40] 고 발표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1,2차 핵실험때는 플루토늄(Pu)을 사용하였으며, 3차 핵실험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 정권은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전파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도 지난 통치자와 같이 핵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를 기조로 국가를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전격적으로 채택하였다.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노선'은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인데, 각각의 병진노선에서 군사 부분만 분류하여 정리하면, 김정은의 '핵무력 건설'은 김일성의 '국방건설'을 계승한 것이며, '국방건설'은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광

39) 나무위키, "김정일 유훈", 2020년 11월 24일 접속
(https://namu.wiki/w/10%EC%9B%94%20%EC%9C%A0%ED%9B%88)

40) 나무위키, "북한 3차 핵실험", 2020년 11월 24일 접속
(https://namu.wiki/w/%EB%B6%81%ED%95%9C%EC%9D%98%203%EC%B0%A8%20%ED%95%B5%EC%8B%A4%ED%97%98)

의의 핵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41] 북한의 핵무력 건설은 4차, 5차, 6차 핵실험으로 이어졌고, 2017년 11월 29일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선대 통치자들의 핵개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탄도미사일과의 결합을 통한 실제 운용 가능한 핵무기로서의 개발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핵개발의 토양을, 김정일은 핵무기 개발의 체계를 완성하였고, 김정은 통치시기에 실제 무기로서의 투발이 가능한 핵·미사일 통합체계를 완성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에는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홍보 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이뤄졌다. 이러한 도발을 통해 북한의 가장 큰 적인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토대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후 대등한 위치에서 제재해제 등을 달성하려 한 것이다.

4) 소결론

김일성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을 실감하였고,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김일성에게는 커다란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김일성의 핵에 대한 공포는 유일체제 확립과 사회주의 혁명 투쟁 의지와 맞물려 핵을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여 핵개발에 대한 야욕을 불태운 결과, 어느 정도의 핵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42]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보다 더 심각한 국가 위기, 체제 위기, 정권 위기 속에서 핵을 이용한 위기 관리 전략이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나타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김정일의 국가위기 인식 수준을 높였고, 자본주의 체제보다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실되었으며, 자본주의의 확산은 북한 체제 존속마저도 위태롭게 하였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개발을 더욱 중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의 덩샤오핑이 실용주의를 채택하면서 중국은 실리가

41) 정현숙(2019), “전게서”, p.114.

42) 이몽룡(2018), “전게서”, p.100.

없다면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 직면하게 된 것도 핵개발을 강하게 추진하는 원동력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정권위기 인식에서도 권력 승계에 성공하였지만, 통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위기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었고,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핵개발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 김정일은 자신의 힘만으로도 선대에서부터 활동한 당, 군, 정의 고위 직위자들을 굴복시켜야 했고 전 인민에게 자신이 실질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거대한 업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의 협상력 등 자리매김 부분에서도 핵개발은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43]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개발을 서두르게 되었고, 핵개발을 통해서 국제적인 협상의 우위를 달성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김정은은 후계자 승계 기간은 짧았지만, 김정일이 이루어 놓은 시스템 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김정일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핵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여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십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하여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자체적으로 선언하였다. 김정은 시대에는 억제 뿐만이 아니라 실제 공격능력을 보유한 무기로서의 핵개발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핵에 대한 김일성의 공포에 따른 핵개발 기반 형성, 김정일의 국가 위기 의식 증폭에 따른 핵무기 개발 체계 확립,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무르익은 무기로서의 핵개발, 즉 핵무력 완성 등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핵'은 정권 생존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수단이자, 통치 정당성이며, 국가 그 자체인 것이다.

43) 이몽룡(2018), "전게서", pp.173~174.

제3장 북한의 과거 핵 협상 실태 분석

제1절 북한의 핵 협상 전략

북한의 핵 협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전에 수립한 협상 관련 전략을 세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략을 알아야만 북한이 핵 협상 간 취했던 행동들에 대해 해석할 수 있고 그들이 노린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형적인 핵협상 패턴은 북한의 핵도발, 핵위기 발생과 협상 개시, 일괄타결식 핵합의, 합의 붕괴의 4단계로 진행된다.[44]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기가 공개되고, 이후 IAEA 사찰거부, NPT 탈퇴, IAEA사찰관 축출, 핵재처리시설 재가동, 폐연료봉 추출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킨 후 미국과의 사후적인 대응조치로 핵합의를 진행하고, 이후 다시 합의 미이행에 따른 북해 위기를 다시 되풀이 하는 방식이다.[45]

북한에 있어서 핵개발은 체제존립을 보장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무엇보다 외세의 위협에 다른 고립감을 완화시켜 주고, 북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부의 침략위협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미국과 협상을 통한 경제적 보상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의 확대를 보장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46]

북한의 핵 협상 전략은 김정일과 김정은 통치시기로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먼저 김정일 시대에는 핵개발의 지속적인 유지, 핵능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은닉, 제재 해제, 인민 생존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목표로 핵 협상을 진행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한참 진행 중인 핵개발이 돈좌되지 않도록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 등과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금창리 핵시설 의혹,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 등이 끊임없이 핵 협

44) 전봉근(2011),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호), p.186.

45) 전봉근(2011), “상게서”, p.186.

46) 이우정(2003), “미북간 핵협상의 전략적 환경과 대응체계”(한국동북아논충 제29집), pp.48~49.

상의 이슈로 등장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더 강한 조치(NPT 탈퇴, 핵시설 가동 등)를 무기로 대응했다. 김정일은 성숙되지 못한 핵개발을 살려야 했고, 아울러 아사 직전의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지속하면서 숨바꼭질을 했으며, 결국 핵개발의 바통을 김정은에게 물려 줄 수 있었다.

김정은은 선대 김정일과 달랐다. 그는 핵무력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핵보유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대등한 핵 협상을 진행하길 원한 듯 하다. 즉, 어느 정도 성숙된 핵개발 수준을 무기로 제재 해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했고, 동시에 완전한 핵능력의 제거보다는 자신들의 핵능력은 줄이지만 핵보유국의 지위도 아울러 얻기를 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차,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모든 핵능력의 폐기를 결코 언급하지 않았으며, 시설도 기존 폭파된 풍계리를 포함하여 영변을 포기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 협상에 있어 세계평화, 핵폐기 등 원천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권생존 등 김씨 일가의 영속적인 통치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2절 제1차 북핵 위기

1) 제1차 북핵 위기 발생 배경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핵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IAEA 이사회는 1990년 3월에 북한의 전면안전조치협정[47] 체결을 권고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정치적 상황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과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에게 있어 위기 의식 고조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도록 강요했다.

47) 안전조치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의 핵폭발 장치의 제조에 전용되는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검증활동(NAVER.COM)(검색일 : 2020.11.26.)

이러한 북한에 반해 남한은 (구)소련 및 중국과 1990년 9월, 1992년 8월에 각각 수교를 맺게 되었다. 북한은 최대 원조국이었던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북한을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남한의 한미동맹 강화와 (구)소련과 중국과의 수교 등으로 총체적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1년 9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동년 11월에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제조·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은 국내의 핵물질과 핵시설을 국제사찰에 철저히 공개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확장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북한도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48] 등이다. 북한은 현재 처해있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 침체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동년 12월에 남한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표 3-1]을 채택하였다.

[표 3-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주요내용

• 핵무기의 시험・제조・접수・생산・저장・보유・배비・사용이 금지
•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사찰
• 공동선언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 출처 : 관련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재정리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이 가중되는 속에서 1992년 1월 30일에 1985년 NPT에 가입한지 7년만에 북한과 IAEA간에 핵안전조치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동년 4월에는 이를 발표하였다. 동년 5월에는 IAEA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북한은 핵물질량과 핵시설 16개

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2020년 11월 26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8575)

를 [표 3-2]의 현황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 3-2] 북한 신고 핵시설 현황

순번	시설명	수량	위치	비고
1	연구용 원자로	1기	평북 영변	1960년대 중반 (구)소련에서 도입
2	임계시설	1기	평북 영변	
3(★,●)	5MWe원자로	1기	평북 영변	1980년대 후반 가동 추정
4(★,●)	핵재처리시설	1기	평북 영변	
5(★,●)	핵연료봉 제조시설	1기	평북 영변	
6	핵연료 저장시설	1기	평북 영변	
7	준임계시설	1기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내 위치
8(★)	50MWe원자력발전소	1기	평북 영변	1994년 10월 동결
9(★)	200MWe원자력발전소	1기	평북 태천	1994년 10월 동결
10	우라늄 정련공장	1곳	황북 평산	
11	우라늄 정련공장	1곳	평북 박천	
12	우라늄 광산	1곳	황북 평산	
13	우라늄 광산	1곳	평남 순천	
14-16	원자력 발전소	3기	함남 신포	

(★) :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되었던 핵시설(5개소)

(●) : 2008년 6자회담 결과에 따라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었던 핵시설(3개소)

* 출처 : UPI뉴스(https://www.upinews.kr/), 2020년 11월 26일 접속

2) 제1차 북핵 위기 전개 과정

북한은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라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회에 걸쳐 IAEA로부터 임시사찰을 받았다. 이때 북한은 신고한 내용과 IAEA 사찰 결과 간에 불일치로 인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49] 그 이유는 북한은 약 90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IAEA 사찰단은 북한의 자체 보고와 달리 북한 핵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1989년, 1990년, 1991년 세 번에 걸쳐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는 90그램보다 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50]

한편 국제사회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1993년 5월에 NPT 탈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등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이에 북한은 미북간 참사관급 접촉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1993년 6월 11일 NPT 탈퇴를 잠정 유보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7월에 제2단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북핵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지만, 8월에 들어서서 IAEA의 핵사찰을 방해하고 이후의 사찰협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IAEA와 UN은 10~11월에 각각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고 북한은 더욱 강한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은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북한의 강석주는 11월에 '일괄타결안(package deal)'을 제의하여, 미국이 '포괄적 해결방안'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에 북한은 IAEA의 대북 핵사찰 재개를 허용하고 미국과의 협의하에 4개항[51]의 합의에 이른다.[52]

그러나 북한은 1994년 3월에 진행된 방사화학실험실 사찰을 또다시

---

49) 정희태(2007), "북핵위기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위기관리 연구"(한국정치정보학회), p.115.

50) 박순성(2008), "1,2차 북핵위기와 한반도·동북아 질서 변화",(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13호), p.105.

51) 4개항 내용은 ①사찰개시, ②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재개, ③94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④미북 3단계 고위급 회담 3월 21일 개최 예정

52) 정희태(2007), "전게서", pp.115~116.

거부하고, 이로 인해 IAEA의 대북결의안 채택과 미북 3단계 고위급 회담 취소, 한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중지되었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초래하게 되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NPT의 완전한 탈퇴를 국제사회를 향해 경고하고 UN 안보리에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시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하였다. 이후 북한은 미국 및 IAEA와 지루한 공방을 주고 받는 가운데 또다시 위기 확대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1994년 5월 13일 IAEA에 연료봉 교체 개시를 통보하고, 5MWe원자로에서 8천여 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제거함으로써 과거 핵물질 추출 기록을 덮어버리는 행위를 통해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 의지를 완전히 꺾으면서 무력감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6월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완전한 양보냐? 아니면 전쟁이냐? 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압박했다. 그러자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진행하였고, 6월 10일 IAEA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즉각 채택하여 북한의 극단적 선택이 얼마나 북한에게 불리한지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미국과 IAEA의 조치들에 대응하여 6월 13일 IAEA 탈퇴라는 협박용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UN의 대북제재는 곧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미국과의 전면 대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6월 중순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증강 계획을 검토함에 따라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극에 달하였다.[53]

그러나, 1994년 6월의 북한 핵 위기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와 북한의 김일성 간의 회담으로 극적으로 해소되었다. 카터는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의 회담을 가졌다. 이회담에서 카터는 김일성에게 북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과 NPT에 재가입하고, 북한이 핵시설 동결에 대해서 IAEA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의하였다. 김일성은 카터

53) 정희태(2007), “전게서”, p.116.

의 제의를 몇가지 조건을 내걸어 수락하였다. 우선 북한의 흑연감속로를 폐기하는 대신 대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며,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해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카터와 김일성의 회담이후 미국의 북핵 담당 대사인 갈루치는 1994년 6월 20일 강석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카터와 김일성 합의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편지에서 미국은 핵동결의 포괄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틀 뒤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인 강석주가 카터와 김일성의 회담 결과에 따른 합의와 미국의 편지에서 제시한 새로운 조건을 모두 수용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미국과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북간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고위급 회담 결과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양국 수석대표인 북한의 강석주와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대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차 북핵 위기는 일단락됐다. '제네바 합의' 주요 내용은 [표 3-3]에 기술하였다.

3) 북한의 위기 해소 의도

카터는 미북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당시 언론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카터의 협상 이면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카터는 당시 미 대통령인 클린턴 정부와 북핵 해결 방안을 심층 깊게 토의한 미 정부안을 가지고 1994년 6월 15일에 북한의 김일성과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명예욕이 앞서서 미 정부와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김일성과 선뜻 합의를 하고 만 것이다. 처음부터 북한의 숨은 의도는 미국의 대북 원조 상황을 보고 '북한의 핵시설을 잠깐 동안 동결한다.'라는 전략이었다. 북한은 애초부터 핵을 영원히 폐기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카터는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 협상카드에 성급하게 동의하고 만 것이다.[54]

54) 미래한국 Weekiy, "카터의 세차례 방북이 남긴 교훈", 2020년 11월 27일 접속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8)

[표 3-3] 제네바 합의 주요내용

구 분	이 행 사 항
북 한	•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 • 합의문 서명 1개월 내에 흑연로 및 관련시설에 대한 완전한 동결이행 • IAEA의 북한의 핵시설 동결에 대한 감시 허용 및 협력 제공 •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 해체는 경수로 사업 완료 시 완료 • 5MWe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핵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 및 북한 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 •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 재개 • 경수로 사업이 상당부분 완료될 때, 북한의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 완전히 이행 • 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 허용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진행
미 국	• 2003년까지 북한에 총발전용량 2,000MWe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 • 국제콘소시엄을 대표하여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 체결 노력 • 북한의 흑연감속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로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북한에 중유 공급(연간 50만톤 규모) •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 공식 보장 제공
양국 공통	•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자 협정 체결 • 합의 후 3개월 내 통신 및 금융거래를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 완화 •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 •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

* 출처 : 관련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재정리

북한의 5MWe 원자로는 영국의 마그녹스 콜더홀(Calder Hall) 원자로를 모델로 건설한 것으로 추측된다. 콜더홀 원자로는 열 출력이 268MW인데 반해 전기출력이 60MW이기 때문에 열효율이 약 22.4%로 매우 낮다. 영변 5MWe 원자로의 열효율도 약 17%에 불과하다.[55] 즉 영변 5MWe 원자로는 난방 및 전기생산 용도의 원자로가 아니라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핵물질인 플루토늄(Pu)을 얻기 위한 원자로였던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플루토늄(Pu) 수십kg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이점을 이용하여, 첫째, (구)소련과 중국의 원조가 불가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이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해소시켰고, 둘째, 5MWe 원자로를 동결시키더라도 2,000MWe의 경수로와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무상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을 달성하였기에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합의였다. 반면 미국은 카터 전 대통령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쫓다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더 부여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시도하려는 이면에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 이는 제네바 합의만으로는 핵개발 의지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북아 주변국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핵강국이며, 한국과 일본은 이미 확보한 핵에너지 프로그램으로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도 제공받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보환경과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체제 존립의 위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무기인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56]

---

55) 북한지식사전 WiKiDOK, "영변 5MWe원자로", 2020년 11월 27일 접속 (http://ko.nkinfo.wikidok.net/wp-d/58ca5e3f446dda5f2ec01f87/View)

56) 이우정(2003), "전게서", p.51.

제3절 제2차 북핵 위기

1)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배경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4일 '제네바 합의' 이후 서로의 이행사항을 나름대로 지켜 나가고 있었다. 1998년 8월 17일에 금창리 핵 의혹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뉴욕타임지를 통해 전격 보도되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가까운 평안북도 금창리의 지하터널을 핵개발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완강한 부인에도 미국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관련내용을 공개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후 몇 차례 미북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미국 사찰단이 금창리 핵시설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미국의 사찰단이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동굴뿐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금창리 현장조사 수용 대가로 상당한 규모의 식량을 지원받았다.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 덕분에 고난의 행군 시기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57]

그리고 북한은 동년 8월 31일 사전 예고도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대포동 1호'로 추정됐다. 1단계 로켓은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동해의 공해상에, 2단계 로켓은 고도 65km로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은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자국의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은 대포동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58] 이처럼 '제네바 합의' 이후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2000년 말까지는 미북관계는 큰 문제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수차례의 실무 접촉을 통해 1994년 12월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합의하였고, 1995년 4월에는 미북 직통 전화를 개설하였으며, 1995년 6월에 경수로 협상을 타결하였고 나아가서 2000년 6월에는 미국의 대북 금수 조치를 해제하였으며, 동년 10월에는 북한의 조명록과 미국의 올브라이트가 상호 교차 방문을 하는 등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

57) 한국일보(2018년 7월 3일 보도), "북한 핵능력과 은폐 의혹", 2020년 11월 28일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545348326)

58) 위키백과, "광명성 1호", 2020년 11월 28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A%B4%91%EB%AA%85%EC%84%B1_1%ED%98%B8)

었다.[59]

2001년 1월 클린턴 정부에 이어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북 간의 신뢰에 금이가기 시작했다. 부시 정부는 대북 강경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되길 원했다. 그러던 중 동년 9월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는 9.11 테러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이 테러 여파를 우려하여 테러 반대 입장을 즉각 천명하고 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혹시라도 있을 미국 측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의 충격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한다는 계획하에 막강한 군사력으로 반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제거에 나섰다. 북한을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 안보 위협 국가로 분류하고 사찰의무 이행을 강요했다.[60]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은 연초 국정연설에서 전 세계의 테러조직 소탕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국가들로부터 위협방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을 이라크 등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 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동년 1월에 발간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가정하는 우발사태에 대해 핵 사용을 고려할 경우 관계된 나라 7개국[61] 중 하나로 북한을 선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공격이 끈을 놓지 않았다.[62]

이러한 가운데 2002년 10월 3일에서 5일까지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인 제임스 켈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을 실시하였다. 4일 회담에서 켈리 차관보가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핵개발 추진을 추궁하자 강석주는 이를 시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강석주는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체제를 보장해주면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계

59) 정희태(2007), "전게서", p.118.

60) 정희태(2007), "전게서", p.118.

61) 7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62) 김태운(2012),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의도에 대한 분석과 전망'(컬쳐 컨버젼스, 제3권 제1호), p.4.

획과 미국의 우려 사항인 대량살상무기(WMD)문제 등 안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북·미 최고위급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63] 강석주는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시인과 함께 미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강석주의 이 발언의 파장은 매우 컸다. 그동안 의혹에만 그쳤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이 현실화가 되면서 북핵 위기가 재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제2차 북핵 위기 전개 과정

2002년 10월 16일에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 국무부 발표 다음날에 한국 정부도 북한이 핵과 관련된 모든 의무의 강력히 준수를 줄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25일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북한은 미국이 주장하는 '先 핵개발 포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북 간에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북간에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하자, '제네바 합의' 이행사항으로 2002년 11월 14일에 소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북한의 이행사항 위반에 대해서 2002년 12월분 이후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고, 향후 중유 공급은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행사항 준수와 연계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KEDO가 중유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에 IAEA에 영변 핵시설 봉인 해제와 IAEA 감시 장비 철거를 요구하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하였다. IAEA 결정과 무관하게 12월 21일부터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동결 해제 조치를 개시하였다. 영변 핵시설 5개 동결 대상 중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핵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가공시설), 사용후 연료봉 보관 수조(핵연료 저장소) 등 4개 시설[그림 3-1]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으로서 IAEA가 동결시켰던 모든 영변 핵시설의 봉인이 제거되었고,

63) 연합뉴스(2009년 11월 18일 보도), "강석주-캘리 핵담판 배석 스트로브의 회고", 2020년 11월 28일 접속(https://www.yna.co.kr/view/AKR20091118098100069)

[그림 3-1] 북한 영변 핵시설

* 출처 : 중앙일보(2019년 3월 5일 보도), 2020년 11월 27일 접속(https://news.joins.com/)

또한 IAEA의 감시체계 역시 허물어졌다. 북한은 여기에 거치지 않고 2002년 12월 27일에는 IAEA 사찰관 추방과 방사화학실험실(핵재처리시설) 가동 준비 결정을 발표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2월 29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제네바 합의 파기로 NPT 준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 1월 10일에 NPT 탈퇴 및 IAEA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였다.[64]

그러나 북한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듯한 대화의 개연성을 남겨 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즉, 2003년 4월에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간에 직접회담이 열려야 하며, 만약 미국이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대화의 형식에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한 것이다.[65]

가) 베이징 3자 회담

2차 북핵 위기로 상호 각을 세우던 미북은 중국의 중재로 2003년 4월에 베이징에서 3국 간 다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1차 북핵 위기시 방관했던 중국은 2차 북핵 위기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는 90년대 중국 지도부 교체와 함께 더욱 뚜렷한 현상이 되었다. 북한을 더 이상 과거의 '사회주의 혈맹'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에게 주는 위협 정도는 높아졌으며 이는 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안보 민감성이 높아지게 유도하는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강압적인 접근 태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고자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66] 4월 23일에 '3자 회담'이 열렸는데 결과적

6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차 북핵위기 발발", 2020년 11월 28일 접속(https://www.archives.go.kr/)

65) 김태운(2012), '위 제목', p.5.

66) 김기정·나웅경(2009), "관망과 개입 : 1,2차 북핵 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요인 분석"(중화연구 제33권 제1호), p.39.

으로는 미북간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한 체제 보장과 중단된 경제 지원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 핵개발은 '제네바 합의' 위반 행위이므로 이를 준수하는데 보상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베이징 3자 회담은 북한은 '양자 회담'으로, 미국은 '3자 회담'으로 명명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이 결렬되었으나, 2003년 8월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6자 회담

미국은 베이징 3자 회담 이후 5자 회담(남·북한,미,중,일)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러시아까지 참여하기를 주장하여 결국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제1차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1차 회담에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4단계 로드맵 제시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동시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중유공급 재개 및 북한의 핵개발 포기 의사를 천명하고 미·북 불가침조약 체결, 이후 핵사찰 수용 및 미·북, 일·북 수교, 미사일 문제 해결과 경수로 완공, 핵 폐기의 단계'가 그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요구하고,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수용할 경우 적극적인 대북 경제지원과 식량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대응하였다. 결국 1차 6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 되었으나, 의장국 성명을 통해 6자 회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은 남겨놓았다.[67]

제2차 6자 회담은 2004년 2월 25일에서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담에서는 참가국 간 북한의 핵 폐기, 대북 안전보장,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 회담의 정례화 및 실무그룹 구성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으로 북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종래의

6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6자회담", 2020년 11월 28일 접속(https://www.archives.go.kr/)

입장을 되풀이 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한·미·일 3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미북 수교,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 미국의 북한과 주변국 간 경제협력 관계 방해 금지를 제시했다.[68] 제2차 6자 회담은 미북 사이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제3차 6자 회담은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는 의장 성명에 의해 6자 회담의 지속성과 필요성이 합의 되었으며, 6자 회담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6자 회담이 북핵 문제의 위기를 방지함은 물론, 관련국들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로서 가동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69] 동 회담은 앞의 두 번의 회담보다는 다소 진전되어 미북이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 첫 번째 회담이 되었다. 미국은 국교 정상화, 테러지원국 해제, 대북 불가침 보장, 에너지 제공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대응해 구체적인 핵 동결 시설과 시기 등을 명시한 안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제4차 6자 회담 1단계 회담은 2005년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개최되어 이전과 다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형식적이 아닌 원칙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 핵 폐기의 범위와 평화적인 핵 이용에 관한 양국의 이견으로 공동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핵 폐기에 관해서 북한의 입장은 핵무기와 관련된 핵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발전용 원자로 등 민수용 핵시설은 제외하자는 것인 반면, 미국은 모든 핵무기와 민수용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제4차 6자 회담 2단계 회담은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회담시 참가국들은 우선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해 IAEA의 감독을 받기로 했다. 미

68) 김태운(2012), “전게서”, p.8.

69) 김태운(2012), “전게서”, p.9.

국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북한 불침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70][표 3- 4]하기에 이르렀다.

[표 3-4] '9.19 공동성명' 주요내용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 북한 : 모든 핵무기 및 현존 핵 계획 포기,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 미국 :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 없음 확인
-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 북한의 핵 에너지 평화적 이용 권리 존중,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논의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

- 미북 : 상호 주권 존중, 평화 공존,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
- 북일 : 평양 선언에 따라 과거와 현안 사항 해결 및 관계 정상화 조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의 협력>

- 5개국 :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할 용의 표명
- 남한 200만kw 전력 공급에 관한 제안(2005.7.12.) 재확인

<합의이행 원칙>

-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 이행

* 출처 :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2007)

북한은 제5차 6자 회담 1단계를 2005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였으며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간의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이 종료되었다. 즉, 북한은 경수로 제공 등을 먼저 이행해주면 NPT 가입

70) 김태운(2012), "전게서", p.10.

및 IAEA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가동 중인 원자로의 중지와 핵 동결 이전에 모든 핵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면 경수로를 비롯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9월 15일에 BDA[71]의 자금 동결 문제를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BDA 문제와 6자 회담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해서 확대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제재 문제를 포함한 불만을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표출하였으며, 더욱 큰 문제는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9.19 공동성명' 이행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북한과의 평화적인 협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2006년 12월 18일에서 2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각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매우 신경 쓰이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의 공동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이행 원칙인 '행동 대 행동'에 입각하여 단계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는 2007년 2월 7일에서 1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표 3-5]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은 BDA의 북한 자금 동결 문제의 해결[72]이 지연되고 이를 이유로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봉인·폐쇄 조치를 지연시킴에 따라 6개월 간 지체되었다. 이후 BDA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에 중유 5만 톤이 제공되었고, 북한도 이에 따라 핵 시설 5곳(5MWe원자로, 50MWe원자로, 200MWe원자로, 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에 대한 봉인·폐쇄 조치를 시작하였다. 6자 회담의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의견 조율이 잘 진행되면서, 2007년 10월 3일 제6차 2단계 회의에서

71) BDA(Banco Delta Asia) : 마카오 소재 은행, 2005년 9월 15일에 미국이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

72) 미 국무부는 2.13. 합의 직후, 30일 이내에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재하기로 약속함.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표 3-6]가 채택되었다.

[표 3-5]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 내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북한 조치</th><th>한·미·일·중·러 조치</th></tr>
<tr><td rowspan="2">초기 단계</td><td>30일 이내</td><td colspan="2"><5개 실무그룹(W/G)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 미북 관계 정상화
● 북일 관계 정상화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td></tr>
<tr><td>60일 이내</td><td><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함
● IAEA의 감시 및 검증활동 수행
<핵포기 대상의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td><td><대북 긴급 에너지 지원>
● 중유 5만 톤 상당 지원
<미북 양자회담 및 북일 양자회담 개시>
●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진전
● 북·일 간 과거사 및 미결 관심사안 해결</td></tr>
<tr><td colspan="2" rowspan="2">다음 단계</td><td><모든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 사용 후 연료봉 추출, 플루토늄 포함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 포함</td><td><경제·에너지 인도적 지원>
● 중유 95만 톤 상당 지원
* 중·미·러·한은 ‘평등과 형평 원칙에 기초하여 대북 경제지원 분담, 일본은 우려사항 해소 후 참여</td></tr>
<tr><td colspan="2"><6개국 장관급 회담 개최>
● 9.19 공동성명 이행 확인
●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별도 포럼’ 개최</td></tr>
</table>

* 출처 :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2007)

[표 3-6]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주요 내용

-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재 존재하는 핵시설을 불능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
- 북한은 핵물질,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음.
- 미북관계 개선, 양자간 교류 증대,
-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 북일은 과거 및 미해결 관심사 해결을 기반으로 관계 정상화 노력
-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 경제,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제공(기전달된 중유 10만 톤 포함)
-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재확인

* 출처 : 외교부, 2020년 11월 28일 접속(http://www.mofa.go.kr/)

북한은 '10.3 합의'에 명시한 시한인 2007년 12월을 훨씬 넘겨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2008년 6월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였으며, 6월 27일 영변 5MWe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6월 26일 북한의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10월 11일에 해제시켰다.

2008년 12월 열린 6자 수석 대표회의에서는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북한 핵 시설 불능화 및 이에 따른 에너지·경제 제공 이행 문제, 동북아 안보·평화 지도원칙 등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핵심쟁점이었던 검증의정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2009년 1월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국제사회의 우려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UN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자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에 UN 안보리에서는 6월 12일 대북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북한은 7월 24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를 통해 '6자 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현재 6자 회담은 언제 개최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김정은의 집권 이후에도 "공화국은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전제로 하는 6자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행보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회담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한 회담이 언제 열릴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73]

3) 북한의 위기 해소 의도

2003년 4월에 베이징에서 미·북·중 3개국 회담이 개최되었고, 동년 8월 27일부터 2008년 12월 10일까지 한·미·일·북·중·러 6개국이 6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 회담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성과가 있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2.13 합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껏 높아진 한반도 위기상황을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시키고자 '행동 대 행동'의 합의이행 원칙에 따라 연계성 있게 북한의 핵 폐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제조된 핵무기와 플루토늄(Pu) 및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등은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6자 회담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플루토늄(Pu)과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체계를 착실하게 유지시키면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중유 등 경제적 이익도 챙겼다. 미국은 북한을 대북 강경책으로 압박하면 당연

7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6자회담", 2020년 11월 28일 접속(https://www.archives.go.kr/)

히 항복하고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줄 알았지만 이것은 오판이었다. 미국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모른 상태에서 대북 강경책만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조국의 강성대국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핵무력 완성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매진하였다.

북한과의 협상은 보통국가 간의 외교협상과는 전혀 다르다. 보통국가인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윈-윈의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고, 합의 이후에는 충실히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그러나 북한은 핵 개발 의혹(도발)-위기 고조(갈등)-일괄타결(합의)-합의 붕괴(협의 이행 간 갈등) 순으로 경제적 실익을 취한 가운데 위기국면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하고, 위기국면에서 급조된 핵합의는 지킬 수 없는 약속, 핵심쟁점의 합의 실패 또는 생략, 애매한 조문 등을 포함시켜 합의 자체를 기만시킨다.[74] 이러한 합의 이면에는 정권 및 체제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핵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 프로그램 동결을 할 의지가 없었다. 결국 6자 회담으로 시간을 끈 결과 북한은 무르익은 핵능력을 달성했으며, 미국에게는 더 향상된 핵능력으로 무장되고 더욱 폐쇄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또다시 설득하여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만 남게 되었다. 아래의 [표 3-7]에 북한의 핵개발 연대와 핵 협상의 현황을 융합한 자료를 첨부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핵 협상도 핵개발을 진행하면서도 국가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74) 전봉근(2011), "상게서", pp.189~190.

[표 3-7] 북핵 연대기와 핵 협상 융합 도표

	북 한		미국, 한국, 국제사회
	•원자력연구소 창설(1952) •소련과 원자력 협정 체결(1956)	**1950년대**	
	•영변에 핵연구단지 조성(1962) •IRT-2000도입(1963),가동(1967)	**1960년대**	
	•김일성종합대학 핵물리학과 개설(1973) •전역에서 우라늄 탐사 실시(1978)	**1970년대**	•IAEA와 IRT-2000 부분안전조치 협정 체결(1977)
	•50MWe원자로 착공(1985) •NPT가입(1985년 12월) •5MWe원자로 가동(1986) •핵재처리시설 가동(1989)] •200MWe원자로 착공(1989)	**1980년대**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 영변 핵시설 사진 공개(1989)
		1990년대	•IAEA이사회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권고(1990) •부시대통령 전술핵무기 한반도 철수 발표(1991) •노태우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1991)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1991)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 (1991.12.31.)	
	•IAEA 핵 안전조치협정 서명, 사찰 수용(1992)		•IAEA 대북 임시사찰(6회)(1992)
	•IAEA 특별사찰 거부의사 표명(1993) •NPT 탈퇴선언/유보(1993)	미북 고위급회담(1993)	•IAEA 미신고 시설(2곳) 특별사찰 수용 촉구(1993) •IAEA 사찰단 방북(1993)
김일성 시대	•5MWe원자로 가동 중단(1994) •5MWe원자로 폐연료봉 임의 인출(1994) •IAEA 공식 탈퇴(1994)	제네바 합의(1994)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1994) •IAEA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1994) •지미 카터 방북(1994)
	•핵활동 동결선언(1994)		•IAEA 전문가그룹 방북, 영변/태천 핵동결 사실 확인(1994)
		KEOD-북한 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1995)	•미국,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199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1995) •폐연료봉 처리를 위한 미국 기술진 방북(1995)
	•폐연료봉 밀봉 작업 개시(1996)		•UN,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1996)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1996)
	•북한 CTBT 서명 거부(1997)		•미국, 북한 폐연료봉 8,000개 밀봉 완료(1997)

북 한		미국, 한국, 국제사회
	1990년대(계속)	
•대포동 1호 발사(1998)		•타임지,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제기(1998)
		•금창리 실무조사단 방북(1999)
	미북 고위급회담(1999)	•미, 북한에 식량 40만톤 지원 결정 발표(1999)
		•제1차 연평해전 발생(1999)
		•IAEA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1999)
	2000년대	
		•미, 금창리 2차 사찰(2000)
	1차 남북정상회담(2000)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2000)
		•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2000)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부장관 방북(2000)
•제네바 합의 이행 관련 전력손실 대안 요구(2001)		
•경수로 지연 보상요구 및 흑연감속로 재가동 경고(2001)		•9.11 테러 발생(2001)
•북, 반테러 국제협약 서명(2001)		•IAEA 대표단 영변핵시설 방문(2001)
		•IAEA 과거 북핵 규명 관련 시설 방문, 조사(2002)
		•제2차 연평해전 발발(2002)
•미 핵사찰 허용 요구 거부(2002)		•미, 북 핵시설 국제사찰 허용 강력 요구(2002)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2002)		•제임스 캘리 차관보 방북(2002)
		•미, 북한 고농축우라늄 이용 핵개발 계획 시인 발표(2002)
•북한 핵동결 해제 조치(2002)		•대북 중유공급 중단(2002)
•북, IAEA 사찰단 추방(2002)		
•북, NPT 탈퇴 선언(2003)	북중미 3자회담(2003)	
•폐연료봉 재처리 발표(2003)	6자회담(2003~)	•KEDO 경수로 건설 중단 결정(2003)
•탄도미사일 7기 발사(2005)		•KEDO 사업 종료(2005)
•탄도미사일 7기 발사(2006)		•UN안보리 대북결의안 제1718호 채택(2006)
•북한 1차 핵실험(2006)		
•BDA 자금 러시아 통해 송금(2007)		•2.13합의, IAEA 실무단 방북(2007)
•SRBM 3발 발사(2007)		•한국, 대북 중유 5만톤 제공(2007)
•5MWe원자로 가동중지(2007)		•IAEA 감시검증단 방북(2007)
		•타임지 북-시리아 핵 거래설 보도(2007)
		•미, 핵 불능화 기술팀 방북(2007)
		•한,중,일,러 북핵 불능화 실사단 방북(2007)

	북 한		미국, 한국, 국제사회
	•북, 영변 원자력 시설 운영 및 생산일 미국에 제출(2008)	**2000년대(계속)**	•미국 헤커 박사 방북(2008)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2008)		•미,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미실시(2008)
	•북, 불능화 중단 발표(2008)		
	•북, 재처리시설 봉인 제거 통보(2008)	미북 고위급회담(1999)	
	•IAEA요원 핵시설 접근 금지(2008)		•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 조치(2008)
	•외무성 핵 불능화 재개 발표(2008)		
	•북,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2009)		•UN안보리 의장 성명발표,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촉구(2009)
	•6자회담 불참 및 관련 합의 파기(2009)		
	•핵시설 동결조치 해제(2009)		
	•IAEA 검증요원 및 미, 핵시설 불능화 기술팀 추방(2009)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수개월 내 북핵시설 재가동 가능 발언(2009)
	•폐연료봉 재처리 발표(2009)		
	•2차 핵실험(2009)		•한국 PSI 전면참여 선언(2009)
	•우라늄 농축 착수, 추출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발표(2009)		•UN 대북결의안 1874호 채택(2009)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2009)
	•단거리 미사일 7발 발사(2009)		
김정일 시대		**2010년대**	•천안함 폭침(2010) •해커박사 방북(2010)
	•광명성 3호 발사(실패)(2012)		
	•은하 3호 발사(2012)		•UN 북, 장거리로켓 발사 규탄(2012)
	•3차 핵실험(2013)		
	•5MWe원자로 재가동(2013)		•UN 대북제재 2094호 결의(2013)
	•북, 스커드/노동미사일 발사(2014)		
	•스커드 발사 /SLBM 발사 주장(2015)		
	•4차 핵실험(2016)		
	•SLBM 발사 공개(2016)		
	•대포동 2호(광명성 4호) 발사(2016)		•한국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2016)
	•핵탄두 모형, KN-08 사진 공개(2016)		•UN 대북제재 2270호 채택(2016)
	•스커드/노동미사일/무수단미사일 /SLBM 발사(2016)		
	•5차 핵실험(2016)		•UN안보리 결의 2321호(2016)
	•MRBM인 북극성 2형/스커드미사일 화성 12·14·15형, KN-06 발사(2017)		
	•6차 핵실험(2017)		
	•김정은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 발표(2018)	남북 정상회담(2018) 미북 정상회담(2018)	
김정은 시대	•SRBM, SLBM, 초대형방사포 발사(2019)	2차 미북 정상회담(2019)	
	•SRBM,초대형방사포 발사(2020)		

* 출처 : 관련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재정리

제4장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진정성 판단

제1절 과거 핵협상 실태와 최근 비핵화 관련 협상의 유사점

1) 1차 미북 정상회담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 공존, 공동번영'을 비전으로 삼아 북핵 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라고 밝혔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지가 다부졌다. 이런 마음에 화답하듯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하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 간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자,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급속도로 빠르게 상황이 진전되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판문점 선언[표 4-1]도 채택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하였다. 특히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남·미·북 혹은 남·미·북·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온 휴전을 종식하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하는 등 남북한이 곧 통일이라도 할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후 동년 6월에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5월 24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파기를 선언하자 이틀 뒤인 5월 26일에 북한 통일각에서 남북 간 2차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전과는 달리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유지를 위한 남북 당사국의 해결 의지가 그대로 투영되어 남북 정상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교착 국면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는데 이 회담에서도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75]

[표 4-1] 판문점 선언(요약)

<한반도에 전쟁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 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 협력 및 왕래, 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 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 정상회담 정례화, 직통전화 설치, 올해 가을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 방북 추가

* 출처 : 나무위키, 2020년 11월 29일 접속(https://namu.wiki/)

한 차례 미뤄졌던 미북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2018년 5월 9일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송환시켰다. 또한, 한·미·영·중·러 등 5개국 기자단이 보

75) 위키백과, "남북정상회담", 2020년 11월 29일 접속(https://ko.wikipedia.org/wiki/%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는 가운데에서 2018년 5월 24일에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다. 그러나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당초 약속한 핵 전문가들은 초대되지 않고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재진들만 초대되어 현재까지 '폭파쇼'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고 있다.

이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상 최초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림 4-1]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

* 출처 : 조선일보(2018년 5월 25일 보도), 2020년 11월 29일 접속 (https://www.chosun.com/)

6월 12일 정상 회담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합중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 선언"[표 4-2]이라는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미북 간의 평화를 지속시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정상 회담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외형적으로 회담을 관찰시 그동안 긴장과

적대적 관계였던 양국이 그동안의 앙금을 잊고 상호 신뢰구축으로 오직 밝은 미래만이 펼치질 것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만든 것으로 보였다.

[표 4-2] 싱가포르 선언 내용

1.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염원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미북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2.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 내에서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3.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4. 미국과 북한은 전쟁포로와 전시행방불명자에 대한 유해발굴과 신원 기확인자에 대한 즉각적인 유해송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출처 : 나무위키, 2020년 11월 29일 접속(https://namu.wiki/)

그러나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새로운 미북관계'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미북관계를 위한 노력이나 미북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된 일부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나 전제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문재인-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했다. 판문점 선언은 연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보다는 미국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우선시하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를 앞장세운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남한으로부터는 경제원조까지 챙겨 궁극적으로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식으로의 사회주의 통일을 이룬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입장에서 본 6.12 싱가포르 선언은 미북간에 평화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미북 간에 한반도 내에서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한반도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등 자신들의 의견대로 미국이 동의해 주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선행조치의 하나로 북한의 정확한 핵시설 리스트를 국제사회에 신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핵무기의 일부나 ICBM 등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과 같은 프런트-로딩(front-loading)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저촉된다는 점을 이유로 미국의 선행조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일정한 비핵화 선행조치들에 응하면서, 미국에게 종전선언 및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사항들을 맞교환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이전에 미국의 요구대로 일정한 수준의 선행조치를 수용하면서, 미국에게도 경제와 관련된 일정한 선행조치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다른 목적을 설정한 채 부단히 협상을 진행했지만 얻은 성과는 미미했다.

싱가포르 선언 이후 미북 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례는 없다. 결국 싱가포르 선언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결과로 미국 유해송환이 이루어진 것 외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미북간의 싱가포르 선언 이후 수 개월간 미북 협상에서 가장 큰 논점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등 탄도미사일을 먼저 제거하는 눈에 띄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과 북한은 이를 "강도적 행태"라고 격분하며 단호히 거부했다는 것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핵무

력을 먼저 내놓는, 이른바 '프런트 로딩'으로 불리는 조치들을 먼저 선행할 것을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 왔다는 것을 확인해준다.[76]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핵전력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듯 포괄적 협상은 앞으로 많은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핑크빛 희망으로 포장된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에 촛점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숙제를 남긴 회담이었다.

2) 2차 미북 정상회담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 폴 호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 회담이 열렸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고, 김정은 또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대북제재 해제 수준을 넘어서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였고, 결국 미북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하노이 정상회담 종결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더 많은 것을 북한에 요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합의에 실패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가 쟁점이었다."며,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미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의미있는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던 미북 정상회담이 양 정상간에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한채 2월28일 종료되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α'를 원했지만 북한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협상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도 유엔 제재 중 일부인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5가지 항목만 제재를 풀어주면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폐기한

76) 이삼성(2018), "싱가포르 선언의 본질, 그리고 미북 협상 교착의 배경"(프레시안)

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을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절실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예전부터 늘 협상의 대상이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만족하지 못한 체 세계가 놀랄만한 신선한 이슈인 +α를 제시하였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α'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회담은 실패로 끝마쳤다.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양 정상은 회담기간 내내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고, 회담 종료 이후에도 차후 협상 지속의 여지는 남아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체 협상이 종료되었다..[77]

미국은 왜 '영변+α'를 요구했을까? α는 과연 어떤 것일까? 세계 최대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생떼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α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은폐되어 있는 비밀 핵시설, 또는 핵 프로그램의 일부일 수도 있다. 또는 핵과 관련된 모종의 협력관계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α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북한이 생각하는 허용 수준 이상의 것은 분명하고,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서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애초에 미북은 서로 목적하는 바도 이루고자 하는 옵션들도 달랐다. 서로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댓가로 내놓을 것은 극소화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실패가 예견되어진 회담이었다.

3) 과거 핵협상과의 비교

종전 이후 핵과 관련되어 아무것도 없는 북한이 오늘날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비핵화와 관련된 협의와 회담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하였다고 공언했다. 즉, 북한에게 있어서 합의와 회담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적인 도구이지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77) 정성장(2019),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과 한국 정부의 과제"(서울평양뉴스)

북한은 이미 과거 북핵 협상 때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핵화 과정을 최대한 부분별 단계마다 주고 받기 협상을 유도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했다.[78]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도 과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및 한국 외교부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2박 3일 합숙 협상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심이였다. 영변 핵시설 폐기+α와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투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사업 등'이 논의되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79]

북한은 이미 완성해 놓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말하는 α가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만을 주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얻어서 '핵과 경제' 모두를 취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랬듯이 북한은 철저하게 실리만을 취하려고 하는 핵 협상 전략을 권력승계처럼 답습한 것이다.

최근의 미북 간 핵 협상이 과거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보유국 상호간의 협상을 원한 것이다. 과거 김정일 시대의 핵 협상시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 등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핵무기 체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 협상시 실패하면 국가의 핵개발이 좌절된다는 집념을 가지고 임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 떼를 쓰는 입장에서 진행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미국 등에 핵시설을 공개시 가급적 중요성이 저하된 핵시설을 공개하고 가치 높은 핵시설은 최대한 은폐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그러한 제약사항은 어느 정도 없어진 듯 하다. 자칭 핵보유국이라 칭하면서 핵능력의 완

78) 윤지원(2019), "하노이 미북 핵담판 결렬, 북핵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인가?"(국방과 기술), p.65.

79) 윤지원(2019), "상게서", p.64.

성을 주장하는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으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기존에 확보된 핵능력을 기반으로 실제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 제시하는 요구사항이나,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댓가가 상당히 현실적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와 다르게 핵 협상시 핵보유국 간의 대결로 인식한 것이 과거와는 다른 점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핵시설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에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는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었던 듯 하다. 왜냐하면 영변은 북한 핵개발의 산실이며, 과거에도 핵사찰을 받은 경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영변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영변 폐기를 제시했을때에는 실제적인 폐기를 고려했을 것이다. 더 이상 영변 핵단지의 일부 시설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핵시설로 영변을 선정했다는 사실은 '영변이 없어도 핵개발을 지속하거나, 핵능력을 일부 보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김정일 시기에는 영변 폐기는 핵개발의 포기와 직결된다. 그러나 핵무력의 완성을 주장하는 김정은은 영변을 포기해도 자신들의 핵무력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속내를 알아차렸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강력한 요구조건을 내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 협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 분명하다.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원했으며, 실제 폐기할 핵시설도 선정하여 국제사회에 핵 폐기의 진실성을 알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행동들이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더욱 과감해지고 현실적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도 더욱 강력한 대응논리로 무장된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제2절 최근 북한 핵개발 실태와 비핵화 추진 간의 모순점

1) 법령·선언·신년사 등에서 드러나는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 의지

북한은 2017년 말부터 비핵화와 관련된 본격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관련된 다수의 주장을 공개했다. 경제제재의 해제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획득, 국제무대에서의 자리매김, 정상국가로의 진입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핵화를 주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핵군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혹은 비핵화가 아닌 핵개발을 지속하면서도 제재 해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위장 활동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북한이 공개한 법령과 선언, 신년사 등에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주장한 2017년 전후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소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다음날인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를 개최해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며 새로운 병진노선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했다.[80] 이 법령에는 전 세계가 비핵화될 때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핵능력의 질량적 강화와 김정은만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은 2013년에 이미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미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인 상태에서 핵군축을 진행하는 것이며, 핵능력의 완전한 포기, 즉 불가역적인 핵폐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국가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81]

2017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는 핵개발의 지속을 통한 핵보유의 의지

80)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2016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81) 김민상(2017), "김정은 2017년 신년사 동방의 핵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태영호 발언 현실로" (중앙일보 2017.1.1. 보도기사에서 인용)

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있다. 김정은은 2017년 1월 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발표한 신년사에서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라고 언급했으며, 이를 두고 탈북 국회의원인 태영호(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은 2017년 핵개발을 완성한다는 시간표까지 정해놓고 위험천만한 핵질주의 마지막 직선주로에 들어섰다.”,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의 생각도 동일하다. 동방의 핵 강국을 주장한 것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폐기에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2018년과 2019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핵개발의 지속을 통한 핵보유 의지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명쾌한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에는 제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가적 핵무력의 완성을 주장하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의 발사장치가 책상 위에 있다고 협박성 발언도 하였다. 2019년에는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82] 일각에서는 이를 김정은 집권 이후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처음 밝혔다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했는데 이는 합당치 않은 판단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로서 상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핵을 보유하되 더 이상 질적·양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며, 일단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즉,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선심성 발언인 것이다. 만약 그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했다면, 핵능력의 완전한 폐기를 언급했어야 한다. 상기 신년사가 북한이 비핵화를 주장한 2017년 말 이후 2018, 2019년에 발표되

82)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신년사분석팀(2019),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p.3.

었다는 것은 고려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속셈은 수단으로서의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국가적 이득을 획득하겠다는 것이고, 핵능력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2020년 신년사에서는 김정은의 육성 발표는 없었지만, 2019년 12월 28일부터 4일 간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갈음하였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을 예고했는데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볼 때 새로운 전략무기는 당연히 핵무력과 연결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020년 7월 28일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한 김정은은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핵보유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83] 미국・한국 등과 회담시에 비핵화 문제를 협상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비핵화를 먼저 주장했던 북한의 지도자가 저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비핵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열거한 바와 같이 북한의 법령, 선언, 신년사 등을 고려시 북한의 핵개발은 지속되고 있고, 핵보유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분명히 모순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신뢰성 높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핵능력의 제거에 가까운 비핵화가 아닌 것이다.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베풀면서 댓가를 받는'형식의 핵군축 형태의 비핵화인 것이다.

2) 핵시설 등 실질적인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활성화

북한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선행 조치로서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국제사회(5

83) BBC News, "김정은 '핵 보유 덕분에 북한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할 것'" (2020.7.28. 보도기사에서 인용)

개국)의 참관단을 초청했는데, 기자들로 구성되고 핵전문가 및 과학자들은 단 한명도 참관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를 고려시 풍계리 핵실험장의 완전한 폐기에 대한 의심이 아니 할 수 없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완전한 폐기는 핵전문가들에 의한 현지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일종의 '쇼'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들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변 등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도 존재하며, 은폐된 비밀시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가동 중지, 동결, 폐기, 용도 변경 등과 같은 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말고는 이렇다 할 핵시설의 폐기 조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분석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해외의 여러 씽크탱크들은 북한의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핵개발이 지속 중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20년에 개최된 북한의 열병식에서도 공개된 새로운 ICBM 등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북한의 핵시설 등 핵 프로그램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고, 개발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물로 여러 신형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어느 한 부분을 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은 보이지 않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실제 북한 내부의 핵개발 사정을 고려시 많은 모순점들이 도출된다.

제3절 북한의 비핵화 주장의 진정성 판단

북한은 1950년대 핵개발을 시작한 이래 다수의 핵 협상을 국제사회와 진행했다. 그러한 핵 협상 시 북한은 항상 핵동결, 비핵화를 주장했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듯한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나 자국의 이득을 보장하고, 정권의 생존성을 먼저 보장해 줄 것을 원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핵능력의 완전한 폐기는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

1차 북핵 위기 및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1989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할 시기에 북한은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 경제적 피폐, 한미동맹은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국가 존폐의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존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핵사찰 및 동결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조차도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식하였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북한은 1992년 IAEA의 임시사찰을 수용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핵개발 핵심 프로그램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은폐하였다. 사찰 결과 IAEA는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추출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북한을 압박하였다. 북한은 NPT 탈퇴 선언과 미사일 발사 등의 초강경책을 펼치면서 국제사회와 줄다리를 지속하였다. 1993년 국제사회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이 제기한 '일괄타결안'을 수용하여 핵사찰을 재개하였으나, 1994년 북한은 또다시 방사화학실험실 사찰을 거부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국제사회와 지루한 공방 끝에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제1차 북핵 위기가 해결되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일부를 동결하였고, 북한은 중유 지원과 전력생산용 대형경수로를 지원받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외관상으로는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상호 불신하 눈치보기 싸움이 지속되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북한의 핵개발 진행 경과를 추정해보면 핵

무기 생산용 핵물질인 플루토늄은 이미 추출되어 북한 모처에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통한 파키스탄과의 핵 확산 커넥션을 통해 고농축우라늄 생산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수로 건설 지원, 중유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북한은 핵시설 동결을 통한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속이면서 핵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2차 북핵 위기 촉발요인인 북한 강석주 제1부상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시인이 북한이 국제사회를 철저하게 속여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차 북핵 위기 및 해결 상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저지하고 비핵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비핵화 노력보다는 위기 고조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과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떼쓰기 형태의 부단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협상의 중요한 시기마다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국제사회는 1차 북핵 위기시의 대응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대화와 대북제재로만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북한은 약 11년간에 걸쳐 6번의 핵실험을 자행하였고,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결국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주장, 즉, 핵 협상들은 항상 '용두사미'와 같은 형태로 종료되곤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북한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 핵시설에 대한 동결만을 진행했고, 성과에 목마른 국제사회는 북한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경제 지원 등 많은 옵션을 허용하고도 이렇다 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하여, 이제는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원거리 투사 공격이 가능한 수

준까지 이르렀다.

본고에서 지금까지 열거한 바와 같이 과거의 핵 협상에서 목격되었던 여러 행태들 속에서 결국에는 핵개발로 돌아왔던 북한의 모습과 북한이 제정한 여러 법령들, 그리고 선언 및 신년사들, 핵시설 등 핵 프로그램의 변화 동향 등을 고려 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권 생존을 위한 전략 및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김정은 통치시대에 들어 최근에 진행되는 비핵화에서도 그다지 특이할 만한 긍정적인 면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정은은 1·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핵보유국 간의 핵군축의 형태로 핵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핵개발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궁지에 몰린 쥐처럼 국제사회를 물어뜯었던 북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핵개발 완성을 주장하면서, 미국 등 핵보유국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영변 핵단지와 같은 과거 핵개발의 심장부와 같은 시설이 없어도,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세적 핵 위협이 가능하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영변+α를 제시했을 때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을 고려 시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들도 북한의 핵무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과거와 같이 영변 등과 같이 재래식 핵시설에 결코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제시하는 협상 옵션들은 결코 진실된 비핵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이후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싱가포르 및 베트남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참담한 기분으로 분석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은 너무 쉬운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가의 전 역량을 결집하여 국제사회와 싸우는데 한미를 비롯한 국가들은 과거에도 그렇듯 협상에서의 성과에 집착하고, 지나친 기대로 인한 '핑크빛 상상'에 사로잡

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냉정한 시각으로 북한의 현 상황과 여러 증거들을 고려 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혀 추진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의 역사와 핵 협상의 변천 과정 그리고 결과, 북한의 핵개발 수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찰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첫 번째, 북한 핵개발 역사를 알아보면 핵개발이 정권의 생존을 지탱하고 있는 절대적인 무기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인민의 생활을 희생하고 국가의 생존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 고찰만으로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북한이 지난 수십여 년간 진행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핵 협상은 '핵개발 의혹 제기 – 갈등 상황 전개 – 부단한 협상 진행 – 협상 결과에 대한 갈등으로 도발 및 추가 옵션 제시 – 북한의 핵개발 복귀'의 순서를 지속 반복했다. 즉, 지난 많은 핵 협상들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전 조치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 위주로 진행되었고 북한의 비핵화 관련 성과는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 김정은 통치시대에 들어서도 과거 핵 협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도 무르익은 핵개발 수준을 손에 들고 국제사회에 제재 해제 등 정상국가로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핵보유국의 자리도 탐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단지 정권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협상 자체에 대한 변화 및 중단이 가능하는 등 진정한 비핵화의 실현은 애초부터 고려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과의 핵 협상시에는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심각한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암묵적인 핵보유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고전적인 핵무기 개발의 수준에서 벗어나, 탄도미사일과 결합시키는 체계의 개발을 추구했고 핵무기의 원거리 투사, 그리고 대량살상을 유발하는 공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도자에 의한 핵무기 체계 공개'를 두 번씩이나 진행했고, 수십 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공공연히 핵무기 장착이 가능함을 주장했다. 이미 북한은 절대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여 비대칭전력의 극대화를 달성했고, 세계를 대상으로 협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 묘목 수준의 나무를 꺽는 것은 사람 손의 힘으로도 충분하지만, 아름드리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아름드리 나무와 같다. 이제는 북한의 핵능력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수준의 엄청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핵 협상에 투입되는 국가와 인원들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의중 파악을 소홀히 한다거나 비핵화와 거리가 먼 북한의 위장된 주장을 오인하여 결국은 북한의 핵개발의 숨통을 살려놓는 행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북한 핵능력의 폐기, 완전한 비핵화 등이 가능하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느 선까지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그들이 은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시기와 부분을 인지하고 핵 협상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성, 즉, 김씨 왕조의 번영과 예하에 속해있는 기득권층을 위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견고한 방패를 들고 국제사회의 공격을 방어할 것이다, 우리나

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러한 방패를 뚫고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빌미로 전 세계를 협박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려는 의도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설득, 강요, 댓가 지불 등 능수능란하고 변화무쌍하면서도 실리추구 위주의 전략을 활용하여 그들의 손에서 핵무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과 국제사회에서의 견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법

금번 연구는 앞서 말했듯이 기존에 연구된 문헌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 현지의 자료들 획득하는 것에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하며, 핵 협상 등에 관련된 정부부처의 자료도 확보하는 것에 제도적인 장애물이 많아 기존 연구자료들을 주로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천소스에 의한 평가 및 분석, 결과도출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가 북한의 핵개발 역사, 핵 협상 변천, 핵능력 등으로 한정되어, 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투입되지 못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지난 수십여년간 진행된 북한희 핵개발 저변에 깔여있는 정치적 의도 및 상황, 핵 협상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렀던 정치적 기류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금번 핵 관련 연구결과와 융합했다면 더욱 거시적 시야를 보장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의 핵 협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핵 협상 줄다리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최근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북한 핵 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현재 북한 핵 협상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예상일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핵 협상 사례를 통한 비핵화 진정성 연구를 진행

할시 권장되는 연구방법은, 연구와 관련된 북한의 원천 자료와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공식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구에 투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활약했던 인물 등에 대한 기록자료 및 인터뷰 등도 첨부한다면 더욱 수준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상황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여 핵 협상의 시기와 맞물리는 시점에서의 정치적 동향을 연구결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과 향후 미국 정부와의 핵 협상을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귀결된 결과를 연구와 융합하여 추가적인 결과도출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구본학(2015),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통일정책연구 제 24권 2호)

권태영・노훈・박휘락・문장렬(2014),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한국안보문제연구소), p.129.

국가안보실(2018),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울:청와대 국가안보실), p.3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0년)

국방부(2018), “2018 국방백서”, p.25.

김경민(2017), “김경민 교수의 동북아 평화의 꿈”(서울:(주)새로운 사람들), p.81.

김기정・나웅경(2009), “관망과 개입 : 1,2차 북핵 위기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요인 분석”(중화연구 제33권 제1호), p.39.

김민상(2017), “김정은 2017년 신년사 동방의 핵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태영호 발언 현실로”(중앙일보)

김진하(2019), “체제보장과 비핵화 : 안전보장 패러독스와 북한의 전략적 도전”(전략연구 통권 제78호)

김태운(2012),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의도에 대한 분석과 전망’(컬쳐 컨버젼스, 제3권 제1호), p.4.

남궁영(2003), “북한 핵개발과 미국”(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2호), p.110.

문순보(2019), “북한의 핵전략과 비핵화 전망”(북한학보, 제 44집 2호)

박순성(2008), “1,2차 북핵위기와 한반도・동북아 질서 변화”,(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13호), p.105.

박재완(2018),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함의 분석을 통한 북한 비핵화 방안”(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안준호(2018), “핵무기와 국제정치”(주식회사 열린책들), pp.265～266.

윤덕민(2019), “핵무장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평가”(전략연구 통권 제78호)

윤지원(2019), “하노이 미북 핵담판 결렬, 북핵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인가?”(국방과 기술), p.65.

이몽룡(2018), “북한의 위기인식과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79.
이삼성(2018), “싱가포르 선언의 본질, 그리고 미북 협상 교착의 배경” (프레시안)
이우정(2003), “미북간 핵협상의 전략적 환경과 대응체계”(한국동북아논총 제29집), pp.48~49.
전봉근(2011),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호), p.186.
전성훈(2004),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 실태”(통일연구원), pp.6~7.
전재성(2016),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북 경제제재 심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p.3.
정성장(2019),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과 한국 정부의 과제” (서울 평양뉴스)
정욱식, 강정민(2011), “핵무기”(동아문화사), p.87.
정현숙(2019), “김정은 시대 핵무력건설의 기원에 관한 연구”(한국정치연구 제28집 제3호), p.113.
정희태(2007), “북핵위기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위기관리 연구”(한국정치정보학회), p.115.
조경근(2019), “북한 비핵화의 주요 변수 분석”(통일전략 제19권 3호), p.150.
체제통합연구원(2017), “북한의 체제와 정책”, p.229.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2016),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신년사분석팀(2019),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p.3.
한국국방연구원(2017), “북한 6차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및 함의”. p.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2017), “2017 북한 핵 프로그램 총서”(대전: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p.97.
황부연・김에스라・유호열(2016), “미북 핵협상의 전략적 분석”(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5집 1호, 2016)

2. 인터넷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 “김정은”, 2020년 11월 24일 접속

나무위키(https://namu.wiki/), “김정일 유훈”, 2020년 11월 24일 접속

나무위키(https://namu.wiki/), “북한 3차 핵실험”, 2020년 11월 24일 접속

미래한국 Weekiy(http://www.futurekorea.co.kr/news/), “카터의 세차례 방북이 남긴 교훈”, 2020년 11월 27일 접속

북한지식사전 WiKiDOK(http://ko.nkinfo.wikidok.net/), “영변 5MWe원자로”, 2020년 11월 27일 접속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https://atomic.snu.ac.kr/), “우라늄 자원”, 2020년 11월 2일 접속

연합뉴스(2009년 11월 18일 보도), “강석주-캘리 핵담판 배석 스트로브의 회고”, 2020년 11월 28일 접속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김정일”, 2020년 11월 24일 접속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광명성 1호”, 2020년 11월 28일 접속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남북정상회담”, 2020년 11월 29일 접속

일본 원자력에너지 기구(JAEA), ”IRT-2000“, 2020년 11월 28일 접속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영변 5MWe원자로 플루토늄 추출“, 2020년 11월 3일 접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2020년 11월 26일 접속

한국일보(2018년 7월 3일 보도), “북한 핵능력과 은폐 의혹”, 2020년 11월 28일 접속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2차 북핵위기 발발”, 2020년 11월 28일 접속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6자회담”, 2020년 11월 28일 접속

BBC News(2020년 7월 28일, 보도), “김정은 ‘핵 보유 덕분에 북한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할 것’”

KBS(2016년 3월 9일자 보도), ”핵무기 모형 공개“, 2020년 11월 21일 접속

KBS(2017년 9월 3일자 보도), ”수소폭탄 모형 공개“, 2020년 11월 21일 접속

38norh(https://www.38north.org/), ”5MWe원자로“, 2020년 11월 25일 접속,

ABSTRACT

Authenticity study on the nk's denuclearization considering the analysis of nk's negotiations in the past

Oh, Jun-Seok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Yeom, Gyu-Hyun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K's denuclearization and asks whether nK has authenticity on their negotiation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nK's past negotiation on actual situation.

nK's nuclear desire started with nuclear threats by US, nuclear attacks on Japan during the Korean war. Since then, Kim Il Sung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t the end of 1950s. In 80s, nK constructed the nuclear research complex which included a 5MWe reactor and a nuclear reprocess plant at Yongbyeon site. With this, they dedicated to have nuclear weapon production capability, and by 90s nK likely had the HEU program with the assistance of Pakistan. After 2000s, through 6 nuclear tests and

test launches of BM, they had accelerated nuclear power development. Finally, on November 2017, nK declared 'the accomplishment of nuclear power'.

While nK has developed nuclear power,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put their efforts on impeding nK's nuclear program. In 1989, nK faced the 1st nuclear crisis just after a French commercial satellite released the imagery of Yongbeon nuclear complex to the public. nK responded with a hard-line policy by withdrawing from NPT as well as carrying out nuclear fuel rods from 5MWe reactor. nK's 1st nuclear crisis calmed down with 'the Geneva Agreement' by the mediation of Jimmy Carter, the former U.S. president.

nK's 2nd nuclear crisis was triggered off by Kang Seokjoo, one of the high officials of nK's labor party, in 2002. He revealed that nK has developed HEU program. It implied that nK might have nuclear weapons based on Uranium as well as Plutonium. To solve this, 6 nations, ROK, U.S, Japan, China, Russia and nK, continued the talks until 2008. nK's denuclearization was expected to be achieved through 'ROK-nK 9.19. Joint Statement', '2.13. Agreement', and '10.3. Consensus', but these efforts could not completely stop nK's nuclear development. Due to differing definitions of'denuclearization', no valuable results were achieved through 1st and 2nd US-nK Summit.

Like this, nK's nuclear negotiation repeats the following sequence: raise suspicion of nuclear development, escalate tension, negotiate, fail to fulfill the agreement, propose alternative options, and return to nuclear development. nK has been continuing on nuclear development by deceiv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uclear weapon is as important as the viability of the regime in order to maintain the main propaganda. Multiple evidences exist that nK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power. For instance, KJU revealed that nK intended to have

nuclear power on the on the new year's address. Furthermore, nuclear power is specified in nK law. Since recent denuclearization, there isn't any noticeable follow-up actions other than the explosion of the nuclear test site in Poonggye-ri. nK likely considers 'denuclearization' as a progressive arms reduction rather than complete denuclearization. nK possibly intends to have a social position as a nuclear power na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conclusion, the analysis of nK' authenticity on denuclearization must be ahead. Hopefully a little assistance could be provided to dismantle nK'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denuclearization.

【Keywords】 nuclear development, nuclear negotiation, nuclear power, nuclear weapon, nK nuclear crisis, Geneva agreement, 6 party talks, US-nK summit, Authenticity of denuclearization.